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1. January
Vol. 49

1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2021년 예산 및 정책 방향
정책연구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Data for All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정부재정통계변천사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경제철학 이야기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anuary. 2021
VOL. 49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트

- 재정데이터 연계활용의 트리거,
「데이터기반행정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 재정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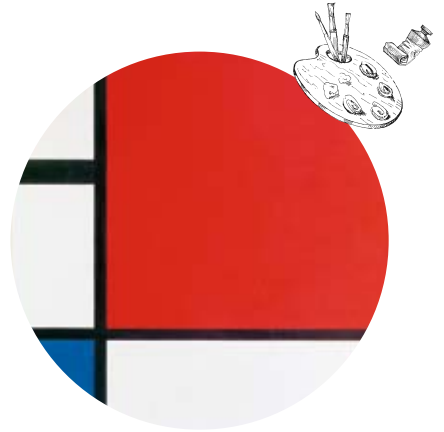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도 및 정보원의 대응전략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국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및 주요 쟁점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6 · 2021년 예산 및 정책 방향

- 2021년도 예산과 경제정책 방향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32 · 정책 연구

-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재정 NOW

- 36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42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8 • 키워드 재정
아동지원
- 52 • 해외재정동향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 58 • Data for All
가트너가 예측한 '행동인터넷'은
재정정보원에서 작동 중

재정 STORY

- 60 • 이달의 재정 이야기
데이터 공동활용을 이끌어갈 「데이터기반행정법」
- 64 • 정부재정통계변천사
- 68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화가의 눈과 경제학자의 모형
- 72 • 경제철학 이야기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간섭주의 경제학의 개척자
- 76 • 재정 캘린더
- 78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데이터 연계활용의 트리거, 「데이터기반행정법」

데이터가 노동·자본에 버금가는 경제요소로 부상했다. 시장에서만 귀한 몸이 된 게 아니다.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도 '데이터 활용 능력'이 기관의 경쟁력인 시대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책수립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에 바탕을 두지(Opinion-Based) 말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Data-Based)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책 수립에 쓸 변변한 데이터가 없다고? 이런 변명을 막기 위해 이 법은 '남의 데이터를 가져다 내 것처럼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관이 자신의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 누구나 가져다 쓰도록 하는 한편,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주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공동활용 시대'가 본격 개막한 셈이다. 하지만 기관들은 아직 막막하다. 법은 시행됐지만 △통합관리 플랫폼에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등록할지 △이 플랫폼에서 무엇을 가져다 내 데이터와 결합할지 △다른 기관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달라고 요청할지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이다. 재정데이터를 다루는 재정전문기관 입장에서 '데이터 공동활용 시대 준비사항'을 미리 탐색해봤다. 아울러 해외사례에 대한 컬럼(22쪽), 법제처의 「데이터기반행정법」 관련 인터뷰(60쪽)와 올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 행동인тер넷을 통한 활용 사례도 실었다(58쪽). -편집자 주-

1 _____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왜 만들고 어떤 내용을 담았나?

과학행정의 시대다. 과학행정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데이터기반(Data-Based), 통계기반(Statistics-Based)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어떻게 표현하든 결론은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은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을 제정·시행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2019~2021년 구축해 2022년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용할 <차세대 dBrain 시스템>의 목적이 ‘데이터에 의한 재정정책 의사결정 지원’인데,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시스템과 법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에 이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왜 더 필요할까? 기존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데이터 공개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의 공동활용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굳이 비유한다면, 「공공데이터법」은 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 즉 일종의 소매(小賣, 혹은 B2C)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및 거래, 즉 도매(都賣, 혹은 B2B)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의 의무 △다른 기관에 데이터 요청 △다른 기관에 데이터 제공 의무 △제공 거부 시 위원회에 의한 조정 등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계활용을 위한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그럼, 한국재정정보원이 연계활용할 수 있는 재정 분야 데이터는 무엇이 있을까? 이는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어떤 재정 분야 데이터가 등록될까?”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데이터 등록 의무가 생기는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어떤 데이터를 등록할지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 일차적으로 등록될 데이터는 각 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승인통계일 것이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성 △최신성 △연계성 등이 중요한데, 이런 조건을 갖춘 데이터로는 국가승인통계가 가장 안정맞춤이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020년 12월 기준 총 30개 분야, 1,229종이 있다.

그림 1. 국가승인통계 30개 분야, 총 1,229종

인구 9종 (0.7%)	복지 28종 (2.3%)	기업경영 26종 (2.1%)	정보통신 36종 (2.9%)	정부·재정 21종 (1.7%)
사회일반 23종 (1.9%)	교육·훈련 15종 (1.2%)	농림 41종 (3.3%)	과학·기술 20종 (1.6%)	금융 15종 (1.2%)
범죄·안전 30종 (2.4%)	문화·여가 24종 (2.0%)	수산 13종 (1.1%)	도소매·서비스 21종 (1.7%)	무역·국제수지 17종 (1.4%)
노동 37종 (3.0%)	주거 15종 (1.2%)	광업·제조업 17종 (1.4%)	임금 11종 (0.9%)	환경 37종 (3.0%)
소득·소비·자산 6종 (0.5%)	국토이용 10종 (0.8%)	건설 20종 (1.6%)	물가 9종 (0.7%)	에너지 15종 (1.2%)
보건 61종 (5.0%)	경제일반·경기 12종 (1.0%)	교통·물류 27종 (2.2%)	국민계정 23종 (1.9%)	지역통계 590종 (48.0%)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검색(2020.12.17. 기준)

3 ————— 재정 분야 국가승인통계는?

위 국가승인통계 분류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개 분야 중에 ‘재정·정부 분야’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속한 통계는 고작 21종이다. 1,229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1.7%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1종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재정통계라고 부를만한 것은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생산하는 △통합재정수지 △국유재산현황 △국가채권 △국가채무 등에 더해 국세청의 △국세통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 등 채 10개가 안 된다.

이외에 △통계인력 및 예산 조사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현황 △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공직생활 실태조사 등 대부분은 ‘재정·정부 분야’ 중 ‘정부 분야 통계’에 해당한다.

표 1. 국가승인통계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종류

no.	통계명	작성기관	통계 종류	작성 방법
1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통계청	일반통계	조사통계
2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3	국유재산 현황			
4	국가채권			
5	국가채무			
6	남북 인적왕래 현황	통일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7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8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현황			
9	보훈보상금 지급 현황	국가보훈처	일반통계	보고통계
10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조사통계
11	지방세 외 수입징수 실적	행정안전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12	지방세통계			
13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1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 통계			
15	국방통계	국방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16	조달통계	조달청	지정통계	보고통계
17	국세통계	국세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18	병무통계	병무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19	공무원 총조사	인사혁신처	지정통계	조사통계
20	국가공무원인사 통계		일반통계	보고통계
21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일반통계	조사통계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검색(2020.12.17. 기준)

4. '재정·정부 분야' 이외의 통계 중 연계·결합분석 대상 통계 찾기

그러면 '재정·정부 분야' 이외의 나머지 29개 분야 1,208개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재정통계라고 부를만하거나,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만한 통계는 없을까? 검토 대상을 국가승인통계 전 분야로 확대해, 연계 및 결합분석에 유용할만한 통계를 선별해 보았다. 선별 기준은 △정부 재정지출과의 관련성, △지출통계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줌으로써 재정사업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지, △재정 연구 및 재정정책 수립·운용에의 활용성 등으로 잡았다. 그 결과 아래처럼 20종을 선별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시대에 맞춰 '재정정보원이 가장 먼저 활용할만한, 혹은 제공을 요청할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실업급여 현황, 고용안정지원금 현황 등 재정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볼 수 있는 항목을 가진 △고용보험통계를 가장 먼저 뽑았다. 또 근로계약 형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재정통계와 결합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한국노동패널조사도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소득·소비·자산 분야에서는 △재정패널조사를, 보건 분야는 △보건 의료실태 △진보통계 등을,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국민연금통계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선별했다. 경제일반·경기 분야의 △경제총조사, 무역·국제수지 분야의 △무역통계 △수출입물류 통계 등도 포함했다.

그림 2. 국가승인통계 분야별 우선 연계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



자료: 국가승인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5 ————— 결합분석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탐색

이렇게 선별한 20종을 재정정보원의 기존 통계와 연계 혹은 결합해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 보았다. 국가가 승인한 정확한 통계라고 해도 연계·결합이 가능하려면 데이터 형식, 조사 주기, 조사 대상, 표기방법 등 다양한 변수들을 따져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는 각 기관이 자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에 따라 관리하고 최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선별한 20종의 통계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이유로 연계·결합에 많은 제약이 눈에 띄었다. 우선 통계별로 조사 대상과 기간이 다르고, 작성주기가 연·월·일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데이터의 공표 연·월·일과 데이터의 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빈번했고, 심지어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통계의 경우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반면 경제총조사의 경우 작성주기가 5년이며, 조사기준 연도 이듬해 4월에 통계가 공표되고 있다. 따라서 두 통계자료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작성주기와 공표시기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공통계¹⁾의 경우, 통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Open API 여부도 매우 부분적으로만 제공돼, 손쉬운 접근·활용을 제약하고 있었다.

표 2. 일부 통계 간 메타데이터의 차이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 방법	조사 대상/대상지역	작성주기	공표시기
고용보험통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통계	사업체/전국	월	작성기준 월 해당월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통계	가구/전국	1년	조사기준 연도 익익년 4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	가공통계	기타/전국	1년	작성기준 연도 익익년 10월
국유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보고통계	기타/전국	1년	작성기준 연도 익년 5월
경제총조사	통계청	조사통계	사업체/전국	5년	조사기준 연도 익익년 4월

자료: 각 통계의 「통계정보보고서」

¹⁾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통계.



6 —————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활용한 자료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필수

결국, 데이터의 연계·활용과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형태 그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자료 요청 조항을 활용해 데이터 보완 혹은 추가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 단위 등록 자료에 대해 월 단위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이 국가승인통계를 만들기 위해 수집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관계도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 정보원 보유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이용제한 등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기관이 알아서 등록하고, 제공·요청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포괄범위(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표주기(연·월·일), △시계열 유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 시대에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은 국민·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데이터 공개자였다. 이제, 「데이터기반행정법」 시대에는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①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도 및 정보원의 대응전략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jeonjy@klri.re.kr)



1 시작하며

2020년 6월, 우리 사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¹⁾을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들었다. 바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다.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위해 우리 사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데이터에 기초를 둔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요청이 법률로 표현되었다. 바야흐로 행정은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법적 임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정보, 행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행정이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것은 반드시 옳은가? 행정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판단 안에 갇히지는 않을까? 오랜 세월, 실무와 경험으로 쌓인 직관적 전문성을 과소평가해 버리지 않을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행정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률로 선언된바, 행정이 데이터에 기반을 두라는 것은 행정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행정의 방법, 즉 국가를 비롯한 공공단체가 일하는 방식에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행정의 방법은 행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법은 행정이 이전부터 하던 서비스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방법에 관해 우리 사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행정의 방법 자체가 행정서비스 자체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수단을 활용해서 행정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수 있다면, 행정은 수단을 바꿔야 한다. 행정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수단이 서비스 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를 예로 들어보자.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었다². 지난 20여 년간 노력한 전자정부 사업, 즉 정부의 전자화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시민들은 가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한다. 정부의 전자화가 행정의 방법, 수단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릴 수 없다. 방법의 변화가 서비스의 변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니, 서비스의 변화를 위해 과감히 방법의 변화에 투자한 결과가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열매로 돌아왔다.

요컨대 데이터 활용이라는 방법은 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부합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가?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재정보의 내일을 구상할 수 있다.

재정보는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가장 요긴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재정보는 행정이 관리하는 다른 정보와 다르다. 우선 재정보는 모든 행정에 관련된 정보이다. 재정이 사용되지 않는 행정은 없기 때문이다. 출연금에 연구, 민간의 보조사업, 사무 위탁에 따른 대금 등 조직은 민간이지만 국가재정이 사용되는 일들이 많다. 재정보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 기능을 기준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아우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역시 이러한 가능성,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조직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² 제정 당시 법률의 명칭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재정정보는 행정이 관리하는 다른 정보들과 달리 엄격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재정운용의 책임성 때문이다. 즉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 자체가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직결된다. 재정 사용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재정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능의 활동을 기록한 정보 중에 재정정보만큼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들이 또 있을까?

이처럼 재정정보는 폭넓게 행정의 기능을 기록한 매우 정확한 정보라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 아니, 이제는 활용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해 표현된 우리 사회의 의지이다. 재정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행정이 재정정보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3 재정정보, 행정을 뒷받침할 가능성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재정정보는 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재정정보가 행정의 기반이 되는 것의 목적은 행정 서비스의 향상이다. 재정정보를 활용하면 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가? 어려운 점은 행정은 다양하고, 재정정보는 ‘재정’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재정정보의 범위는 넓지만, 넓은 범위에 걸친 정보는 재정이라는 관점에서만 기록된다. 한 측면에서 파악된 데이터가 다양한 행정의 다각적 이해관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답은 오히려 ‘재정’이라는 본질에 있다.

재정정보는 재정에 관련된 정보라서 행정의 재정 작용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행정은 다양하지만 행정의 재정 작용에는 언제나 재정의 논리가 적용된다. 재정 작용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때로는 양자가 갈등하지만 결코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다. 재정에 적용되는 논리, 즉 원칙을 기준으로 행정을 기록한 것이 재정정보에 담긴다. 재정정보는 행정이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 비록 행정은 다양하지만 행정이 사용한 재정의 내용을 데이터로 활용하면, 이어지는 행정의 재정 작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재정운용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재정정보를 재정운용 판단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운용 행정의 기반을 데이터에 두는 것이다. 재정운용 판단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하게 되면, 재정을 받아쓰는 각 행정 기능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재정을 배분받게 된다. 사용할 때는 적법성과 효율성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이상으로 재정정보 관리와 활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는 필요한 만큼 모아지고 있는가? 국가재정의 운용 책임은 국가의 재정당국에 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쓰이는 곳으로부터 재정정보를 확보하는 권한은 충분한가? 조직의 성격, 관할 등 각종 사유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모아지는 정보는 쓰기에 알맞게 만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정보 생성을 표준화해야 한다. 재정 집행 주체



의 각 기능에 맞게 표준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하도록 협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재정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떨어진다.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한 범위로부터 모이면,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정보·데이터를 분석·가공·활용하는 데 불합리한 제약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4 ————— 맺음말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행정하라는 우리 사회의 법적 요청에 응답하는 일이다. 재정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재정운용 행정 자체의 기초를 객관적 데이터에 둬으로써 제반 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가 재정의 책임성에 상응하도록 폭넓게, 정확하게 모여져야 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재정정보 관리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관련된 제도에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보완은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지 못한다. 시스템을 고쳐 기능을 추가한다 해도 법으로 막혀 있으면 쓸 수 없다. 시스템 보완이 제도 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훨씬 앞서 법 제도적 한계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고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에 맞지 않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따라 수정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나중에는 제도는 열렸는데 시스템 수정이 어려워 기능 변화가 지체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비단 재정정보의 영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수많은 정보시스템들이 법률이라는 강고한 근거를 힘입어 만들어지고 나서, 행정의 기능이 시스템에 갇혀 경직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재정정보 관리의 내일을 위해서 재정정보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재정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을 계획하고 사용하고 또 돌아보는 일에 소모적인 논란이 줄고 객관적 증거와 확신이 늘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관한 법률(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의 제정 과정 및 주요 쟁점

홍중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johneyhong@gnu.ac.kr)



“Data are the lifeblood of decision-making and the raw material for accountability. Without high-quality data providing the right information on the right things at the right time; desig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effective policies becomes almost impossible¹.”

¹ <http://www.undatarevolution.org/wp-content/uploads/2014/12/A-WorldTat-Counts2.pdf>

1 ————— 입법과정

Paul Ryan 하원의장과 Patty Murray 상원의원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를 설치하는 「2016년 증거기반정책위원회에 관한 법률(P.L. 114-140)」²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3월 30일 서명·공포해 시행되었다. 이 위원회는 약 1년 이상 활동하면서 정부의 데이터 수집(증거확보)을 통한 정책 결정 노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17년 9월 7일 최종보고서(증거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전망 〈The Promise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³를 공개했다. 이에 기초해 성안된 법률안은 3개의 Title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통과되었다⁴.

2 —————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⁵

증거기반 정책 결정에 관한 법률은 연방 증거구축 활동(Federal Evidence Building Activities),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 Act), 기밀정보 보호 및 전략적 효율성(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 101) 연방기관들은 소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리예산처(이하, OMB)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 및 주요 쟁점
2. 기관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 이용 및 획득하고자 하는 데이터
3. 데이터 기반 증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석적 기법이나 접근방법
4.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개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는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 기타 제약사항을 모두 포함)

² <https://www.cep.gov/about/public-law-114-140.pdf>

³ <https://www.cep.gov/cep-final-report.html>

⁴ <https://www.datacoalition.org/two-years-of-progress-on-evidence-based-policymaking-in-the-united-states/>

⁵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P.L. 115-435)은 미국 연방의회 법률정보시스템(<https://www.congress.gov/115/plaws/publ435/PLAW-115publ435.pdf>) 참조.

각 기관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을 평가관(Evaluation Officer)으로 임명해 증거구축 활동을 조정하고, 통계처리에 관한 전문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데이터를 통계처리하는 정책, 기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조연하도록 해야 한다.

OMB는 증거구축을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Data for Evidence Building)⁶를 설치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전략계획은 기관별 통계, 평가, 연구 및 분석역량의 범주, 질, 방법, 효율성 및 독립적 수행능력 등을 측정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연방감사원(이하, GAO)은 ① 자료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주요 쟁점, ② 정책평가기법을 활용하는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어떤 조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권고할 사항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OMB는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공포하면서 우수한 평가사례를 선정해 함께 알려야 하고, 각 기관은 그 지침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사관리처는 기관 내부에서의 예산사업 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량, 기술과 능력을 확인하고 입직경로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력관리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Sec. 202)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Machine-Readable Data) 형식으로 데이터 자산(Data Asset)을 공개해야 한다. 총무처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온라인 연방데이터 목록을 관리하고, 일반 국민이 한 곳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단일한 지점(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각 기관은 종합적인 데이터 저장소(Data Inventory)를 개발·관리하고, 데이터 관리책임관(Chief Data Officer)을 임명해야 한다. 이들은 OMB가 주도하는 데이터 관리자 회의(Chief Data Officer Council)에 참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생성, 활용, 보호 및 배포할 수 있는 최상의 관리기법을 논의하고 각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공유협약(Data Sharing Agreements)을 잘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⁶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경제국(Secretary of Economic Affairs)에 설치, 데이터 공유, 연계,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처장에게 조언·지원한다(<https://www.bea.gov/evidence>). 구성은 각 부처 관료들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26명이며, 2020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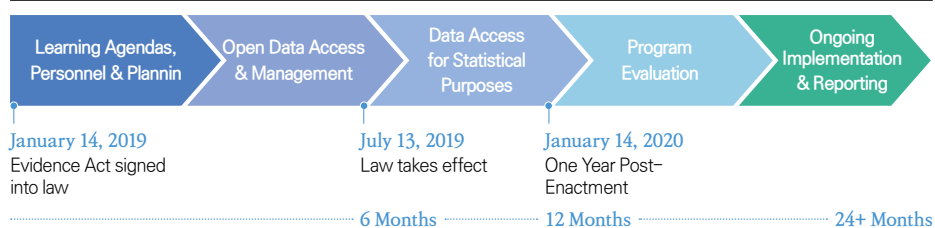
GAO는 ①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가치 있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②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③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 저장소가 완전하게 개발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OMB는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하고 이행한 성과가 있는지 등을 2년에 한 번씩 확인·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Sec. 302) 이 법률은 2002년 기밀정보의 보호 및 통계적 효율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 통계기관 혹은 통계부서는 ① 증거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적시에 생산해 발간해야 하고, ②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통계처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③ 통계처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활용과정에서 배타적 사용과 기밀성을 담보해야 한다.

(Sec. 303) 어느 기관이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증거로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떤 통계기관 또는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법령상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통계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 자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OMB는 ① 이 법률에 따른 행정규칙과 기준 및 정책들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② 통계기관과 부서는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을 위해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하며, 그리고 ③ 각 행정기관과 의회 예산처,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자들 그리고 기타 개인 자격으로도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1. 증거기반정책결정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출처: OMB Memorandum [M-19-23]⁷⁾

⁷⁾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7/M-19-23.pdf>



3 _____ 데이터 기반 증거구축 활동 주요 사례

1) 영구임대주택

만성적인 노숙자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장기적인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서비스를 결합해 노숙자들을 지원하게 되면, 만성적인 노숙자들 개개인이 우발적 비용이 드는 응급실 입원 또는 임시 노숙자 시설 체류 등을 포함해 긴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⁸.

⁸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dopted the Federal definition, which defines a chronically homeless person as "either ① an unaccompanied homeless individual with a disabling condition who has been continuously homeless for a year or more, or ② an unaccompanied individual with a disabling condition who has had at least four episodes of homelessness in the past three years." (See 1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91 and 578, 2015.)

또한, 정부가 노숙자를 지원(개입)하는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가장 높은 만성적인 노숙자들에게 영구적인 지원주택을 제공하면 사회적 안전망의 다른 구성요소(보건의료, 교육, 기초생활비 등)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는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관리 정보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에 축적된 행정 데이터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실태조사자료 등을 결합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증거(정책 근거자료)들이 축적되고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최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지난 몇 년 동안 만성적인 노숙자들을 위해 영구적인 지원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장려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만성적인 노숙자가 27%나 감소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2) 마약 남용 예방 교육

1983년 처음 시작된 마약 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DARE) 사업은 원래 L.A.에서 유치원생부터 12학년(고3)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마약 사용과 갱단 가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약 남용 예방 교육(DARE) 사업은 지방경찰청 및 검찰 수사관(Local Law Enforcement Officers)들과 협력해, 마약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사업이 가장 확산되었을 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50개국 이상의 학교 중에서 75% 이상이 참여했다⁹.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30차례 이상 이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마약 남용 예방 교육(DARE) 사업은 본래 의도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10대들의 마약 남용을 상당히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교외(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 사업이 오히려 마약 사용을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1년도에 (공중보건국의) 의무국장(Surgeon General)은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하고 마약 남용 예방 교육(DARE) 사업을 ‘비효율적인 주요 예방 사업(Ineffective Primary Prevention Program)’이라고 규정했지만 “심각한 마약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주는 다양한 정책평가와 메타 분석이 견고하게 잘 기획되고 수행되었음에도 그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¹⁰.

⁹ <http://www.dare.org/about-d-a-r-e>

¹⁰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110.

마약 남용 예방 교육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과 협력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Keeping It REAL)”라는 과목을 시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마약 남용 예방 교육 사업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폭력, 약물 남용, 그리고 다른 위험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폭넓은 비전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¹. 개정된 교과목을 시범 추진한 결과(선택을 해야 하는 한계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명시적인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¹².

3) 근로자에 대한 투자

근로자에 대한 투자와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증거(정책 근거자료)의 목록(포트폴리오)에 따르면, 비록 그 증거자료가 구체적인 전략들이 결합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소득수준 및 근로의 기회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고용노동부의 성인 근로자 지원 사업(U.S. Department of Labor's Adult Program)은 고용 장벽에 직면해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해고 근로자 지원 사업(Dislocated Workers Program)은 이미 해고되었거나 고용계약의 만료 또는 해고를 통보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사업은 모두 다양한 교육·훈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험하지 않고(Non-Experimental)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평가한 연구결과 성인 근로자 지원 사업의 참가자들은 비교집단보다 분기별 소득이 증가했지만, 해고 근로자 지원 사업의 참가자들은 몇 분기 동안 수입이 감소했다.

「고용혁신 및 근로의 기회 제공에 관한 법률(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에 따라서 2014년도에 근로자에 대한 투자 지원 사업을 재허가하면서, 새로운 법률은 성인 근로자와 해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할 때 지역별로 사정에 맞추어 해당 지역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 항목별 자금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율했다. 「고용혁신 및 근로의 기회 제공에 관한 법률(WIOA)」은 기존의 증거목록에 기초해 그 성과를 알려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다.

¹¹ DARE America, “D.A.R.E.’s keeping it REAL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Adhere to Lessons From Prevention Research Principles”; HYPERLINK “<https://www.dare.org/d-a-re-s-keepin-it-real-elementary-and-middle-school-curriculumsadhere-to-lessons-from-prevention-research-principles>”<https://www.dare.org/d-a-re-s-keepin-it-real-elementary-and-middle-school-curriculumsadhere-to-lessons-from-prevention-research-principles>

¹² Randy Borum and David Allan Verhaagen, Assessing and Managing Violence Risk in Juvenile(New York: Guilford, 2006).



4) 소결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마약 남용 예방 교육(DARE)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투자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각각 연방정부의 정책의 이행성과를 알리기 위해 개발된 증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향후 다양한 정책의 혜택과 의문점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정책결정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 증거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되었다. 정부는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2010년 성과평가 개정법률(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따라서 의회는 지속해서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증거를 더 잘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¹³.

「2014년 고용혁신 및 근로 기회에 관한 법률(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에 따르면 고용통계국은 다양한 사업평가와 광범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승인했다. 「2014년 농업법(The Agricultural Act of 2014)」은 개인들이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

¹³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Public Law 111-352, January 4, 2011); <https://www.congress.gov/111/plaws/publ352/PLAW111publ352.pdf>



고 유지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해볼 것을 요청했다¹⁴. 「2015년도 예산법(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과 보험사업(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이 개선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도록 다시 권한을 부여했다¹⁵. 그리고 2015년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법률(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in 2015)」은 교육 사업을 재승인하면서 증거에 기반한 보조금(Evidence-Based Grants) 규모를 확대했다¹⁶. 이외에도 보조금의 지급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증거를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등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증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다른 법률과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의회에 의해 정부의 증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증거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더 좋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3년 연방정부 부처들에 대한 회람문서(Memorandum)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거를 사용하고,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생산하며, 정부 업무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혁신할 것을 권장했다¹⁷.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은 특히 정부 효과성(Government's Effectiveness)을 향상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¹⁸.

¹⁴ "Agricultural Act of 2014"(Public Law 113-79, February 7, 2014); <https://www.congress.gov/113/plaws/publ79/PLAW-113publ79.pdf>

¹⁵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Public Law 114-74, Sec. 821, November 2, 2015);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74/PLAW-114publ74.pdf>(accessed August 10, 2017).

¹⁶ "Every Student Succeeds Act"(Public Law 114-95, December 10, 2015);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¹⁷ OMB,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Memorandum M-13-17);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omb/memoranda/2013/m-13-17.pdf>

¹⁸ https://www.whitehouse.gov/sites/whitehouse.gov/files/omb/budget/fy2018/ap_6_evidence.pdf

4 ————— 합의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예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기초해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은 현대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정보의 처리방법 등과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다양한 법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조정할 수 있는 국립보안데이터서비스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을 통해 정부 내에 있는 기존의 자원(데이터 인프라 등)을 재정비해 정부가 수집한 기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최신의 역량을 확립하고, 통계작성 목적만을 위해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 정부와 다른 관할 당국이 연방 정부의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특히 수입, 임금 및 기타 소득에 관한 데이터(Data on Income, Wages, and Earnings)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현재 증거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민의 소득자료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승인절차를 다르게 운용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장벽을 만들어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접근을 쉽게 하도록, 외부 연구자들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민감한 공공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제한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단일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재정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한다면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접근(Secure Data Access)의 개념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지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할 때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 예산과 경제정책 방향

2021년 예산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어서 정부는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재정은 확장 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2021년 경제전망과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IMF는 특히, 우리나라가 2020~2021년 합산 성장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예산 △국제기구의 전망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2021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sokim@kpfis.or.kr)

1 _____ 2021년 재정 총량

올 예산 규모는 총수입 482.6조원, 총지출 558.0조원이다. 증가율로 보면,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0.2%, 8.9% 늘었다. 경제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여건 약화 탓에 수입은 살짝 늘었지만,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영했다. 국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0.4조원 감액했고, 총지출은 2.2조원 증액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지출이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재정대응만큼은 신속하게, 유연하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 물량 확보, △보육 및 돌봄, △택배·배달·미화원·방문 돌봄 등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보호 △보훈·장애인 지원 △탄소 중립 선제투자 등이다.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보면,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5.4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30.5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4.9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런 적자폭은 GDP 대비 3.7% 규모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로는 150.8조원, 4차 추경 기준으로는 109.1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39.8%)이나 4차 추경 기준 비중(43.9%)보다 썬뚝한 셈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세입기반은 약화된 반면 지출소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악화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9%, 국가채무는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1. 2021년도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A)	4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수입	481.8	470.7	483.0	482.6	-0.4	0.8	0.2
총지출	512.3	554.7	555.8	558.0	2.2	45.7	8.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30.5 (-1.5)	-84.0 (-4.4)	-72.8 (-3.6)	-75.4 (-3.7)	-2.6 (-0.1%p)	-44.9 (-2.2%p)	
국가채무 (GDP 대비, %)	805.2 (39.8)	846.9 (43.9)	952.5 (47.1)	956.0 (47.3)	3.5 (0.2%p)	150.8 (7.5%p)	

자료: 기획재정부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K-방역, 고용 안전망 구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7조원(총 지출 대비 3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84.7조원(15.2%), △교육 분야 71.2조원(14.0%), △국방 분야 52.8조원(9.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8.6조원(4.6%)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으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020년 본예산 대비 20.7%가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환경 분야 17.8%, △SOC 분야 14.2%, △R&D 분야 13.2%, △보건·복지·노동 분야 10.6% 등이 뒤를 따랐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약 3~9% 내외로 늘었고, △교육 분야는 유일하게 1.9%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상위 4개 분야의 공통점은 2025년까지 총 114.1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분야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분야는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물관리 스마트화, △SOC 분야는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미래 신산업 투자, △R&D 분야는 AI·빅데이터 및 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이 높은 증가율을 주도했다.

2 _____ 국제기구들의 2021년 경제전망 및 정책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 전망¹에서 2021년 세계경제가 기존 전망(5.2%, 2020년 10월 발표)보다 높은 5.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및 치료제가 보급되면서 2분기에 경제회복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는게 수정 전망의 주된 이유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주요 국가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데 이어, 2020~2021년 합계성장률에서도 한국이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0년 -4.2% 역성장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4.2%,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도 -1.1% 역성장에서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2.8%,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¹ 국제통화기금(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1.1.26. 발표)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세계	2.7	-4.2	4.2	3.7
G20	2.9	-3.8	4.7	3.7
유로존	1.3	-7.5	3.6	3.3
미국	2.2	-3.7	3.2	3.5
한국	2.0	-1.1	2.8	3.4
중국	6.1	1.8	8.0	4.9
일본	0.7	-5.3	2.3	1.5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2020.12.1)

우리나라의 이런 성장률 회복은 주로 반도체 매출 증가와 SOC 투자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2019년 -12.1%에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1%, 8.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 SOC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한 26.5조원이 편성됐다. 또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대면 소비와 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할 것이냐에 경기회복세가 달려있는 셈이다.

IMF는 이런 경제전망과 함께 각국에 △보건 자원 확보 및 국제공조 △피해계층 지원 유지 △녹색 및 디지털 투자 등을 권고했다. OECD도 우리나라에 △취약계층 집중지원 △기업 구조개혁과 직업훈련·근로자 역량 강화 병행 △한국판 뉴딜 활용 등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① 비정규직·서비스업 등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②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 이연과 경감조치 연장, ③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병행, ④ 기업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그린 뉴딜 및 포용적 성장 달성 등 4가지를 꼽았다².

세계은행(WB)은 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들은, 장기적 성장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별로 달리 선택해야 하지만, 공통 대안으로 △재정건전화, △정부 효율성 증대, △산업 다변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투자 등이 제시됐다³.

²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2020.12.1.)

³ 기획재정부, 「'21.1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2021.1.6)

3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잡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⁴.

그림 1.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경제·방역 간 균형 도모 -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디지털 뉴딜) - 벤처창업 활성화 및 산업육성 -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 - 서비스 산업 혁신 및 문화강국 실현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강화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탄소 중립) - 사람투자·규제혁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재정 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강화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 코로나19 시대 격차 해소 -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강화 -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① 코로나19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②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③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경제와 방역 간 균형 도모, △대내외 위험의 촘촘히 관리⁵ 등을 꼽았다. 특히 전년 대비 5.8% 증가한 558조원의 재정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둘째,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를 위해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수출 강국의 위상 회복과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은 방역 안정을 전제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SOC 분야에 26.5조원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민자사업에도 각각

⁴ 6가지 정책 방향의 세부내용 중 재정투자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⁵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자금의 유동성 관리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1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65조원, 17.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셋째,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⁶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은 ④ 혁신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⑤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⑥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전략’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20년 3회 추경부터 2025년까지 114.4조원(총사업비 16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뉴딜에 총 44.8조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그린 뉴딜 사업에 42.7조원, 마지막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국가 기반 마련 사업에 26.6조원이 투입된다.

이런 경제정책 추진과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노력이 더해지면서 내수와 수출 양쪽 모두 나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20년에 -4.4%로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 △심리개선 △정책지원 등에 의해 3.1%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등 IT 부문의 견조한 증가세와 가속상각·세제지원 등의 투자 유인책에 힘입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1%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연간 22만 명이나 줄었던 취업자 수는 경기개선과 일자리 정책 등에 의해 15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고용률(15~64세)도 65.8%에서 65.9%로 소폭 개선되지만, 19년 수준(66.8%)에는 못 미친다. 무역은 수출이 반도체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8.6% 증가하고, 수입은 이보다 높은 9.3%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63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가 회복되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지난해(0.5%) 보다 높은 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 3. 2021년 정부 경제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1.1 ⁷	3.2
취업자 증감(만 명)	22	15
- 고용률(%)	65.8	65.9
소비자물가(%)	0.5	1.1
경상수지(억불)	680	630
- 수출(%)	-6.2	8.6
- 수입(%)	-7.5	9.3

자료: 기획재정부

⁶ 본예산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2020년 0.04조원에서 2021년 1.4조원으로 증가했고, 이는 약 78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⁷ 2021년 1월 26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1.0%로 발표했다(속보치 기준).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12월 발간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정성호 연구위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장윤정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를 개별 공개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공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최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2 분석 내용

우리는 흔히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의 과오를 범하





고 있다. 즉, 연계 제약을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제도 또는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열린재정에 통합해 공개하고 있는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 등이 달라 유의미한 재정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법제 및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 항목 간 내부거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 정책적 제언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공개포털은 유지하되, 열린재정(통합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에 재정정보를 집계해 연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연계로직은 시스템 개발시는 물론 개발 이후라 하더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표준연계로직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 개편 대안은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국가재정법). 또한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보조금법). 거버넌스 대안은 재정통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yjchang@kpfis.or.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했던 재정 확장으로 인해 2020년 4차 추경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18.1% 증가, 국가채무는 약 118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기 종료 후 정부는 재정지표를 얼마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등 국제기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¹.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재정지표 개선을 도모했던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연구했다. 성공적으로 재정지표가 개선된 국가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고 차이를 빚어낸 요인을 분석했으며,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행된 정책사례와 그렇지 못한 정책을 비교하여 추후 건전화 정책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2 분석대상 및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다. 이 4개국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의 재정정책 기조는 어떠한지, 금융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과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의 규모가 얼마였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정위기 대응 이후 각국 정부가 건전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내놓은 중기 건전화 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고, 해당국의 예산문서와 재정계획 문서 등을 검토하여 이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이어서 건전화 정책 중 특징적인 세부 정책이 잘 이행되었는지 혹은 실패하거나 변경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중기 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 검토결과, 4개국 중 독일과 일본이 각각 중기 건전화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수지와 재정적자 절반 감축에 도달했다. 이들 국가는 위기 이전 재정개혁 경험과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

¹ IMF Fiscal Monitor, 2020.10.





다. 반대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건전화 기간 중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지출 감축에 한계가 있었으며, 정권교체 후 건전화 정책 계획도 변경되었다. 그 결과 2010~2011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5년경까지 재정수지 균형 도달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세부 정책 계획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지출 감축, 행정비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감축, 세입 확충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로 세입 확충 정책은 조세 저항이나 이를 염두에 둔 잦은 변경으로 인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처럼 위기 이전의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분야에 대한 지출 감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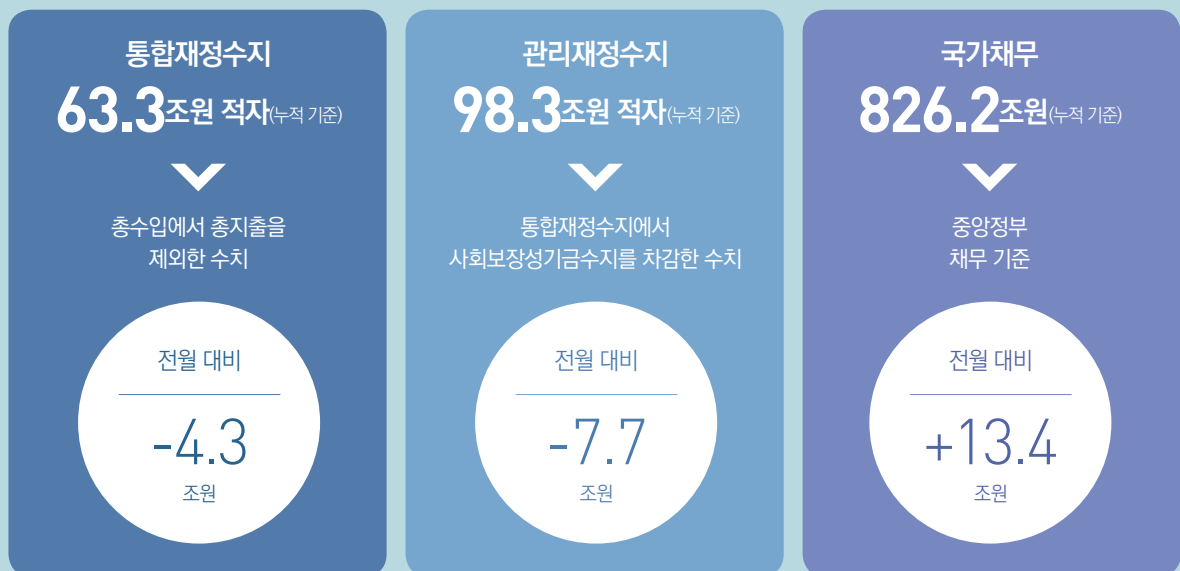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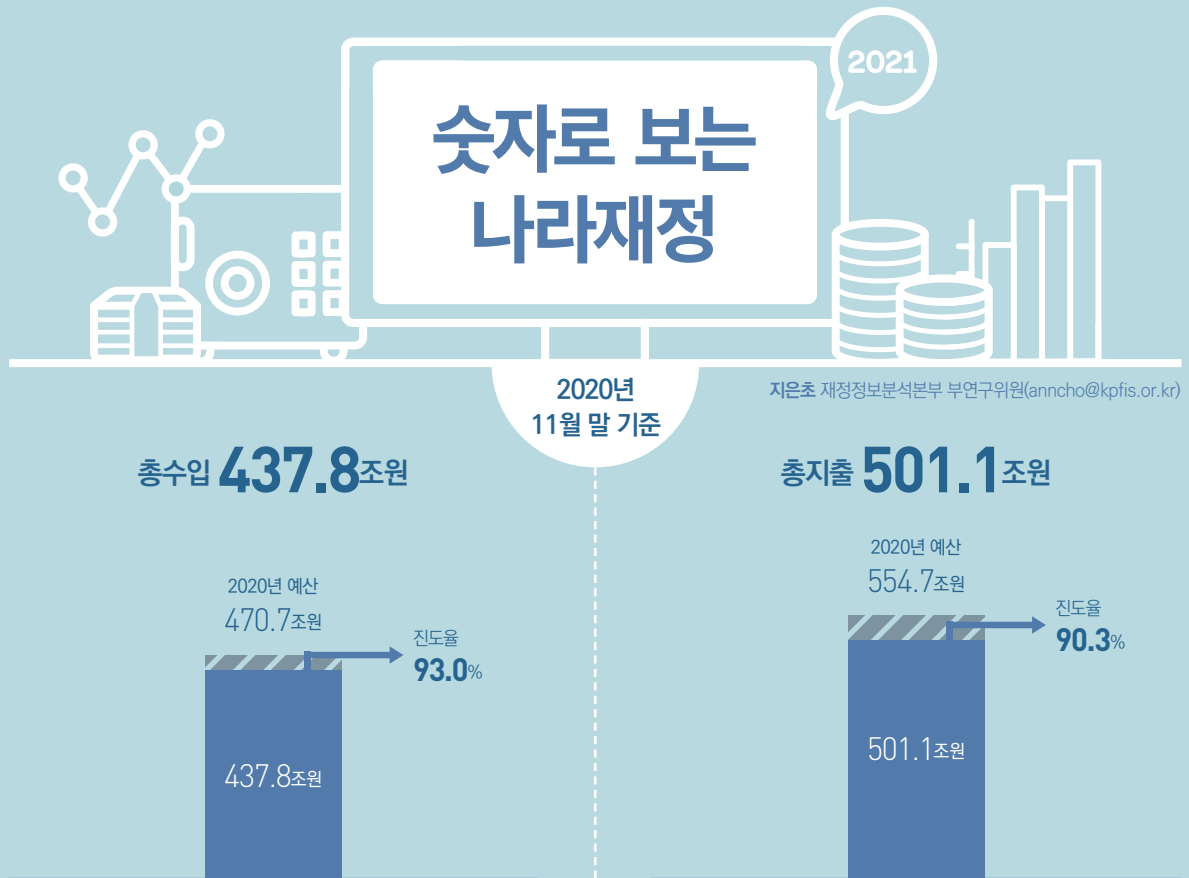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4개국의 사례에서는, 필요할 때 과감하게 적자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독일이 그렇지 못했던 영국이나 이탈리아보다 위기 이후 큰 폭의 경기 반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동안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중기 건전화 계획의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를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이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시도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재정구조 재편과 지출효율화 노력을 향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건전화 계획은 세입 확충보다는 세출 감소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시의적절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금융위기 이후 건전화 정책 이행과정을 보면 상당수 증세 정책의 도입이 지연되었으며, 사재기나 소득기간 조정과 같은 조세회피 행위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재정적 효과가 축소된 사례도 나타난다. 따라서 세입확충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건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치적, 제도적 환경이 성공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준칙을 헌법화한 독일이나 세부 감축계획 없이 지출 증가율 동결을 선언한 일본의 사례는 간명한 재정규율도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EU 차원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이나 내각책임제 하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정 규율의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시행된다면 그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량 규율의 실효성을 보완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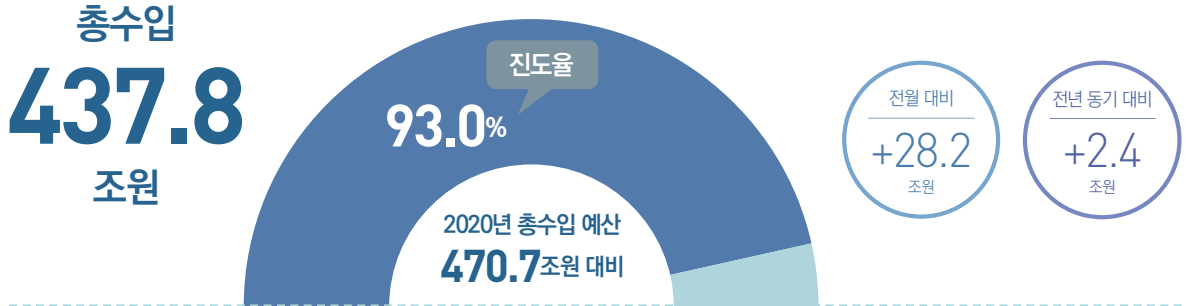
주 1)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1.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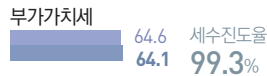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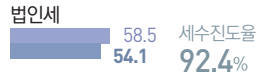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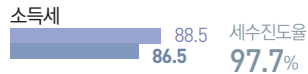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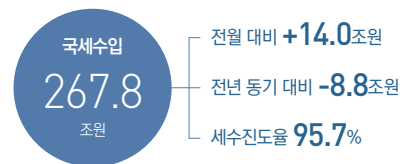
• 2020년 11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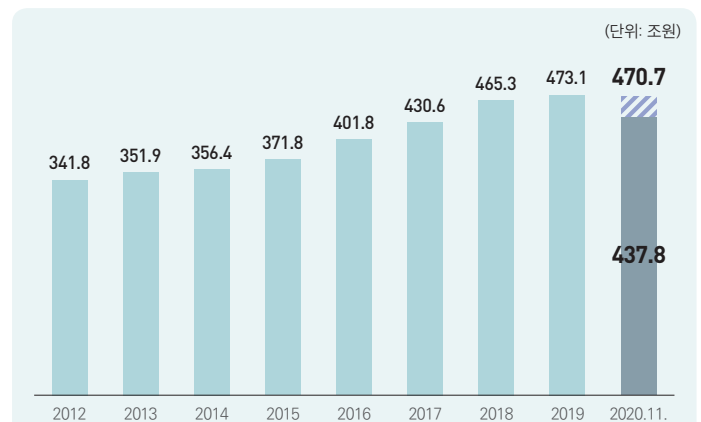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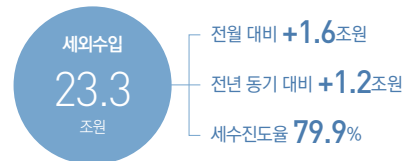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11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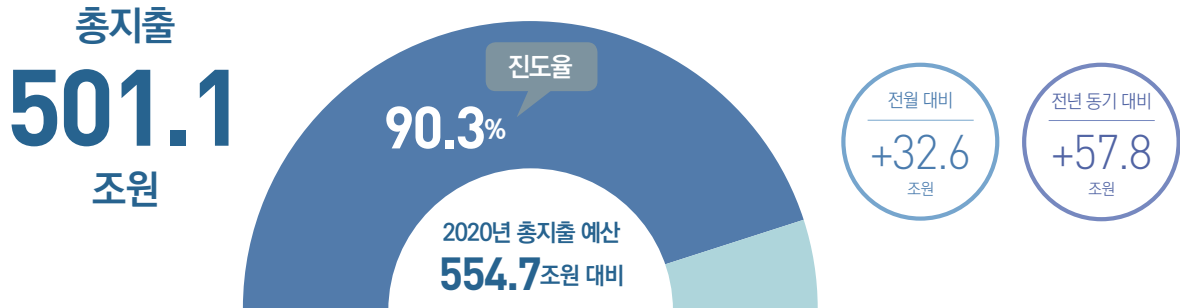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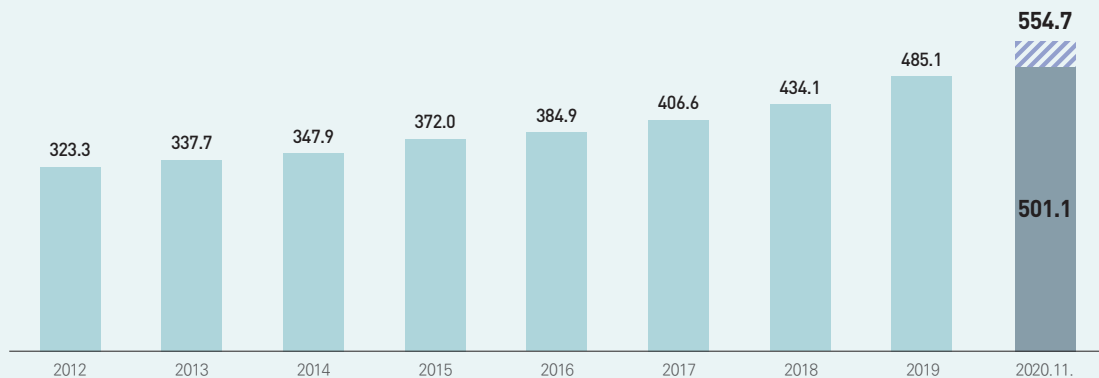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92.1%**



*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 변경 등 반영으로 연간계획 변경(308.8조원→309.3조원)

(단위: 조원, %)

	연간계획(A)	1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309.3	284.8	92.1
중앙부처	260.8	241.3	92.5
공공기관	48.5	43.5	89.7

2021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11월 실적	집행률
1	행정안전부	48.2	99.6
2	보건복지부	20.6	98.8
3	교육부	55.0	96.3
4	산업통상자원부	7.6	95.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	95.7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1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63.3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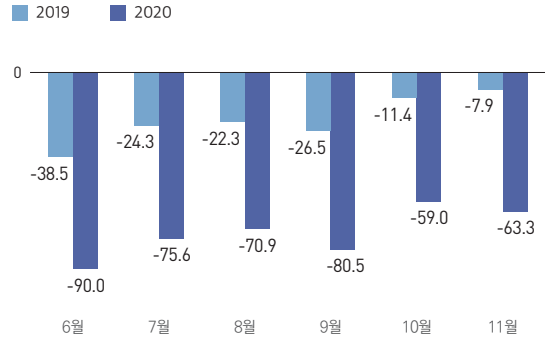
-4.3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5.4

조원



관리재정수지

98.3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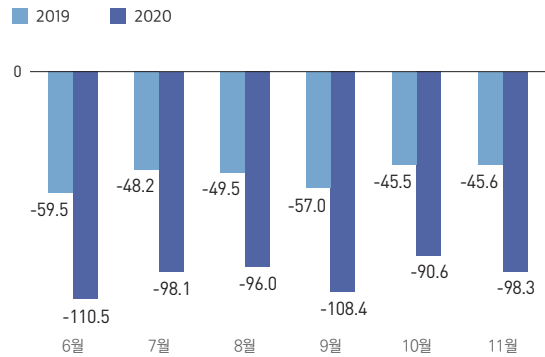
-7.7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2.7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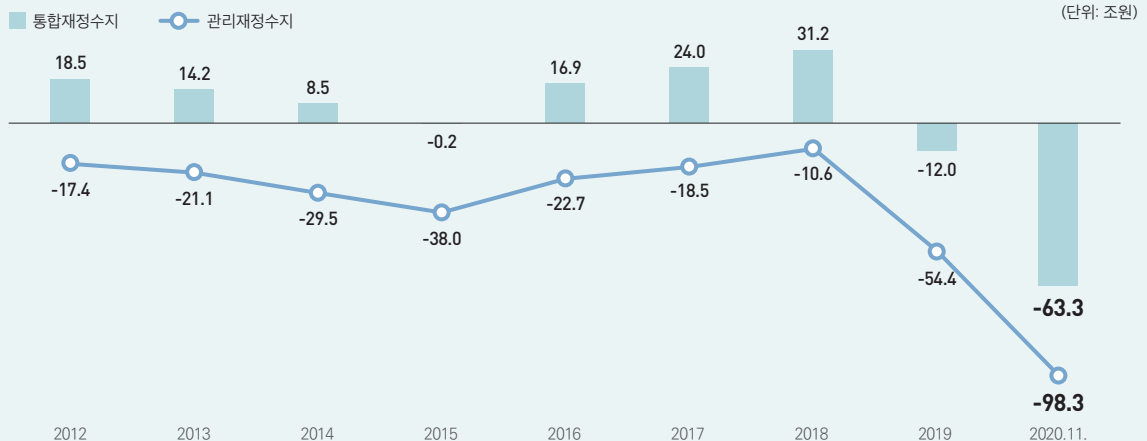
35.0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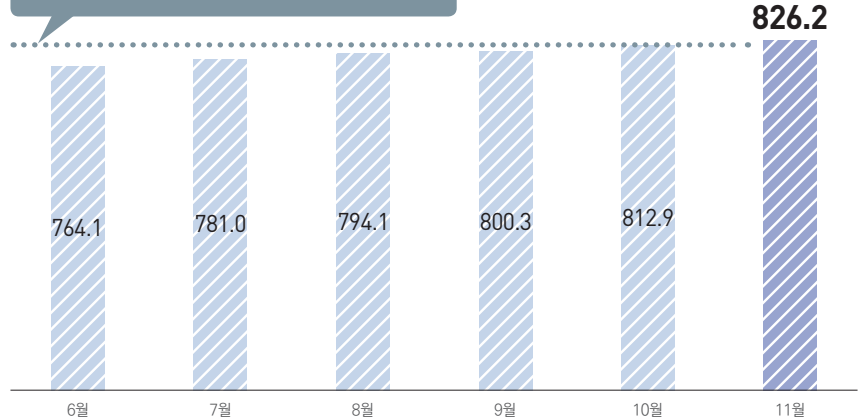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26.2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14.9조원



전월 대비

+13.4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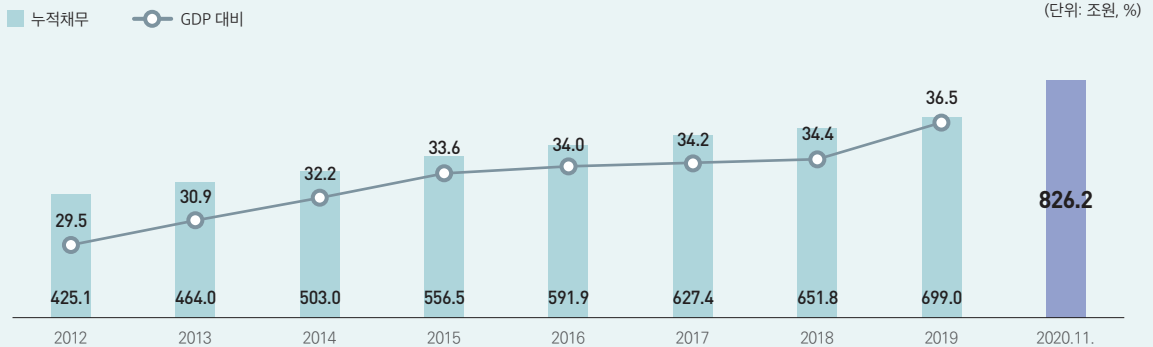
전년 대비

+127.3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재정수지

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인포그래픽·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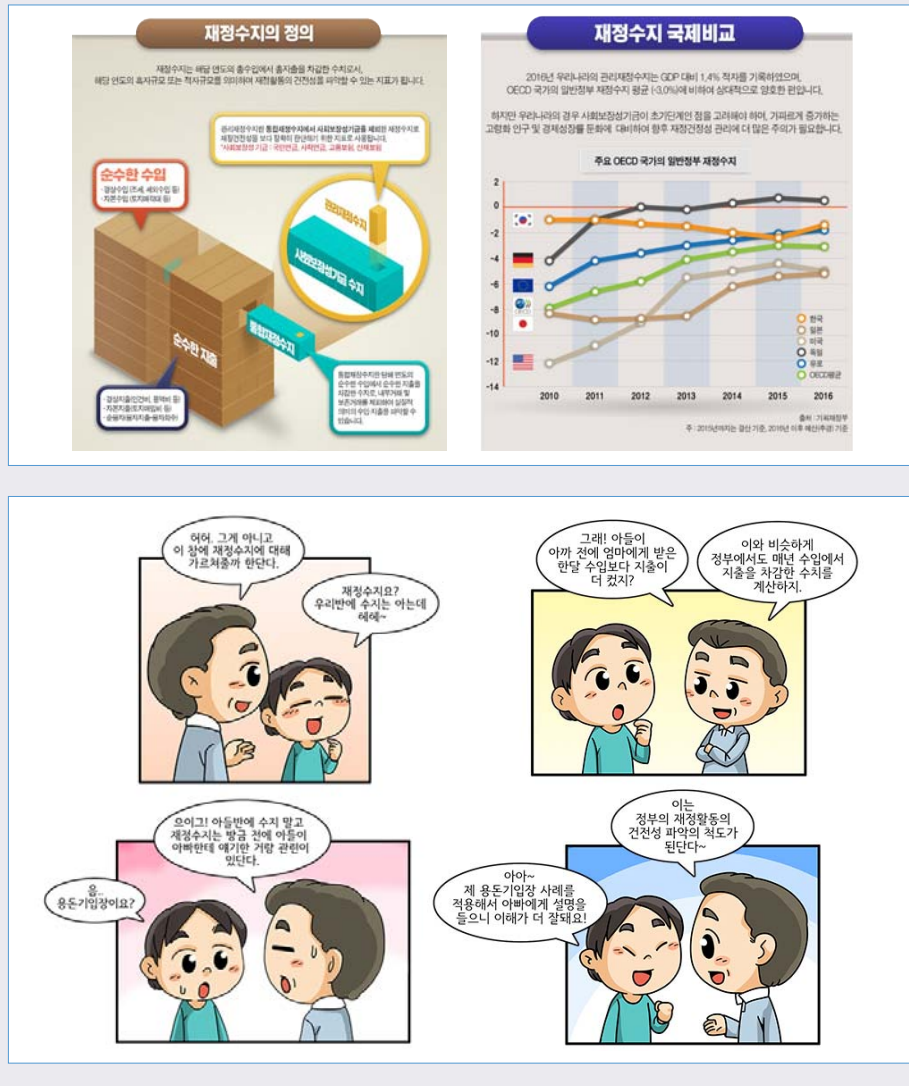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수지의 정의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수지의 정의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의, 추이, 국제비교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웹툰을 통해 재정수지 개념 등을 소개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중앙재정 데이터 및 문서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치 > 데이터자료 > 재정수지 등 6개의 데이터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치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중앙재정 재정수지와 관련된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수치 > 데이터자료에서는 재정수지와 관련된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등 총 6개의 데이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 관한 SHEET, CHART, OPEN API 탭을 클릭해 재정수지에 관한 용어설명, 월별 데이터 및 차트, OPEN API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SHEET를 클릭하면 각 회계연도별 월별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HART 탭에서는 △총수입 합계 △총지출 합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 API 탭에서는 재정수지 데이터의 ID, 명칭, 설명 등 재정수지와 관련된 OPEN API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자료는 상세재정통계DB > 수치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총 9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 게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회계연도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물입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적으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닫기

재정수지

SHEET CHART

기존년도 2020

메타데이터보기

조회

No	기준년도	기준월	총수입 합계(조원)	총지출 합계(조원)	통합재정수지(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조원)	관리재정수지(조원)
1	2020	1	51.2	50.9	0.3	6.8	4.9	2	-1.7
2	2020	2	77.8	104	-26.2	13.9	9.2	4.7	-30.9
3	2020	3	119.5	164.8	-45.3	24.3	14.3	10	-55.3
4	2020	4	166.3	209.7	-43.3	32.1	18.9	13.2	-56.6
5	2020	5	198.2	259.5	-61.3	40.5	23.8	16.6	-77.9
6	2020	6	226	316	-90	49.5	28.9	20.5	-110.5
7	2020	7	280.4	356	-75.6	56.8	34.3	22.5	-98.1
8	2020	8	317.8	388.7	-70.9	64.5	39.4	25.1	-96
9	2020	9	354.4	434.8	-80.5	72.9	44.9	28	-108.4
10	2020	10	409.5	468.5	-59	81.4	49.8	31.6	-90.6
11	2020	11	437.8	501.1	-63.3	89.6	54.6	35	-98.3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
메타정보보기 ▾

SHEET

CHART

OPEN API

■ 변수명

영세서 다운로드 영증거 신청

- 요청주소
<http://openapi.openfiscaldata.go.kr/BudgetBalance>
- 요청제한 횟수
제한없음
- 기본인자

변수명	요청인자타입	설명	비고
Key	STRING(필수)	인증키	기본값 : sample key
Type	STRING(필수)	호출 문서(xml, json)	기본값 : XML
pindex	INTEGER(필수)	페이지 위치	기본값 : 1(sample key는 1 고정)
pSize	INTEGER(필수)	페이지 당 요청 숫자	기본값 : 100(sample key는 5 고정)

- 검색 요청인자

항목명	요청인자타입	설명
OJ_YY	STRING(선택)	기준년도

출력값

샘플URL

Open API 테스트

결과 메세지

No	항목 ID	항목명	설명
1	OJ_YY	기준년도	기준년도
2	OJ_M	기준월	기준월
3	TOT_RV_SUM_AMT	총수입 합계(조원)	총수입 합계
4	TOT_RV_1_AMT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5	TOT_EP_SUM_AMT	총지출 합계(조원)	총지출 합계
6	TOT_EP_1_AMT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7	ITG_PFIN_RAD_AMT	통합재정수지(조원)	통합재정수지
8	SGU_CLAS_FND_RAD_AMT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9	MG_PFIN_RAD_AMT	관리재정수지(조원)	관리재정수지



3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데이터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지방재정 > 데이터자료 > 통합재정수지비율 당초, 통합재정수지비율 최종, 통합재정수지비율 결산

상세재정통계DB > 지방교육재정 > 데이터자료 >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결산)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수지와 관련된 데이터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지방재정 > 데이터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당초 △최종 △결산 등 총 3개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합재정수지비율 당초'를 클릭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회계연도별 지역별 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비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당초

메타정보열기

SHEET

회계연도

2020

조회

세부조건 변경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연도	지역명	자치단체명	세입	지출	순증자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비율(%)
1	2020	서울	서울특별시	29,981,069,328,000	32,454,289,708,000	739,626,460,000	33,193,916,168,000	-9.68
2	2020	서울	서울특별시	413,648,351,000	474,210,721,000	1,525,357,000	475,736,078,000	-13.05
3	2020	서울	서울특별시	410,792,584,000	509,800,283,000	364,670,000	510,164,953,000	-19.48
4	2020	서울	서울특별시	437,994,034,000	496,077,829,000	7,928,970,000	504,006,799,000	-13.1
5	2020	서울	서울특별시	520,008,783,000	554,979,300,000	1,246,859,000	556,226,159,000	-6.51
6	2020	서울	서울특별시	521,186,245,000	603,220,025,000	612,629,000	603,832,654,000	-13.69
7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19,429,981,000	644,574,521,000	1,757,521,000	646,332,042,000	-4.16
8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96,212,744,000	754,728,196,000	207,685,000	754,935,881,000	-7.78
9	2020	서울	서울특별시	707,504,496,000	742,549,757,000	802,301,000	743,352,058,000	-4.82
10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40,307,970,000	681,293,880,000	1,601,170,000	682,895,050,000	-6.24
11	2020	서울	서울특별시	585,072,963,000	627,484,013,000	2,303,341,000	629,787,354,000	-7.1
12	2020	서울	서울특별시	917,998,709,000	970,276,292,000	2,283,667,000	972,559,959,000	-5.61
13	2020	서울	서울특별시	790,849,907,000	830,353,471,000	1,453,327,000	831,806,798,000	-4.92
14	2020	서울	서울특별시	538,792,120,000	616,182,049,000	1,480,880,000	617,662,929,000	-12.77
15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32,502,280,000	689,698,808,000	1,052,248,000	690,751,056,000	-8.43
16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49,479,640,000	709,657,419,000	4,104,441,000	713,761,860,000	-9.01
17	2020	서울	서울특별시	936,177,318,000	1,009,429,640,000	3,561,039,000	1,012,990,679,000	-7.58
18	2020	서울	서울특별시	668,566,105,000	698,485,739,000	206,945,000	698,692,684,000	-4.31
19	2020	서울	서울특별시	495,263,550,000	522,809,157,000	2,136,910,000	524,946,067,000	-5.65

[19 / 243]

상세재정통계DB > 지방교육재정 > 데이터자료에서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수지를 △당초와 △결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를 클릭하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회계연도별 지역별 통합재정수지 구성 항목과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메타정보보기

SHEET

회계연도: 2020 조회

재무표건 열기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연도	지역구분	항목구분	금액
1	2020	서울	통합재정수지 II (A+C-6)	-10,570,586,000
2	2020	서울	통합재정수지 I (A-6)	-533,919,920,000
3	2020	서울	통합재정수입(A)	9,561,894,194,000
4	2020	서울	통합재정지출(6)	10,095,814,114,000
5	2020	서울	순세정잉여금(C)	523,349,334,000
6	2020	부산	통합재정수지 II (A+C-6)	8,747,415,000
7	2020	부산	통합재정수지 I (A-6)	-62,070,419,000
8	2020	부산	통합재정수입(A)	4,543,509,975,000
9	2020	부산	통합재정지출(6)	4,605,580,394,000
10	2020	부산	순세정잉여금(C)	70,817,834,000
11	2020	대구	통합재정수지 II (A+C-6)	1,000,000
12	2020	대구	통합재정수지 I (A-6)	-55,999,000,000
13	2020	대구	통합재정수입(A)	3,365,228,310,000
14	2020	대구	통합재정지출(6)	3,421,227,310,000
15	2020	대구	순세정잉여금(C)	56,000,000,000

4 정부정책 정보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재정수지' 검색

재정수지 관련 정부의 정책은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재정수지'를 검색하시면 총 59건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59건

재정수지 조회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보도참고] 2020.6.7 (월) 매일경제 ?한국 구조적...		재정건전성과	2020-06-07	18
2013년 1-9월 (누적)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재정관리총괄과	2013-11-29	2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재정관리총괄과	2013-08-30	0
(보도참고) '13년 1/4분기 중앙정부 재정수지		재정관리총괄과	2013-05-31	0
(보도참고자료) 12년 3/4분기(누계) 중앙정부 재...		재정관리총괄과	2012-11-30	0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아동지원’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아동지원사업은 국민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이다. 이런 언급량 상승은 2021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아동·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키워드로는 ‘아동’, ‘온종일돌봄’, ‘사회복지’ 등이 도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아동지원



연관어

아동 온종일돌봄 사회복지 이웃 사랑 가정 복지
 홀트아동복지회 취약계층 사랑의 열매 기부금 지역 문화 학교급식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49.8%에서 2020년 52.8%로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¹⁾」에 의하면 2015년 핵가족의 비율은 81.7%로 직계가족(5.3%), 기타(13.0%)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핵가족의 심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점차 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3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이다.

아동지원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온종일돌봄체계는 아동지원 관련 정책으로,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과 후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에서 아이들의 흥미,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2021년 예산에 기초하면 아동지원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다함께 돌봄 사업’이 57.3% 이상 크게 늘었다.

아동지원 관련 주요 예산

(단위: 억원)				
소관	주요 사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2	1,874.2	2.4%
	다함께 돌봄 사업	262.3	412.6	57.3%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0	210.0	0%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251.1	282.4	12.5%

자료: 열린재정(2021),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재구성

¹⁾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44억원 증가한 1,874.2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는 크게 △아동보호 △교육 기능 △문화서비스 △정서적 지원으로 나눌수 있다.

첫째,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해 생활과 안전 부분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예컨대 생활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지도, 건강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위생건강 및 급식에 대한 지도를 한다.

둘째,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기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들의 지적·인성 성장을 지원한다. 숙제지도, 교과 학습지도 등을 통해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지원하며,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등도 실시하여 아동의 특기 적성을 발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인성·사회성 교육과 동아리활동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셋째, 문화서비스를 통해 체험 및 참여 활동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관람, 견학, 캠프, 여행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통해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한다.

넷째, 정서적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연고자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자교육,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한다.

▶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전년 대비 57.3% 늘어난 41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육아 부담의 경감과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상시·일시 돌봄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데, 상시돌봄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을 의미한다. 일시돌봄은 학교 휴업, 연고자의 긴급사유 등의 이유로 갑자기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필수인력 대 아동비율²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상시·일시 돌봄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선호도와 가용자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결확인, 아동지원, 급·간식 지원 등과 같은 기본 돌봄프로그램과 숙제·독서지도, 신체활동 등과 같은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대상 아동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으로 지역센터별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2020년과 동일한 21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공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다. 돌봄교실은 아이들의 학교, 학년 등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인·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한다.

초등돌봄교실에는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위주로 진행되며,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을 선정하여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방과 후부터 17시까지이며,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에서 운영된다.

‘저녁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1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오후돌봄교실과는 다르게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2021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1.3억원 확대된 282.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운영되는데 주요 과정으로는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생활지원 △특별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문체험활동과정은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 등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한다.

둘째, 학습지원활동과정은 교과학습 및 보충학습을 지도하여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 능력을 지원한다. 셋째, 자기개발활동과정은 청소년 주도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자치활동·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생활지원과정은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 특별지원 청소년캠프,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기존의 과정들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3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 돌봄필수인력 1인당 아동 20명(최대 24명 이내)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경제 현황을 반영한 세계경제성장률과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연 2회(1월, 6월)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월 6일 발표된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의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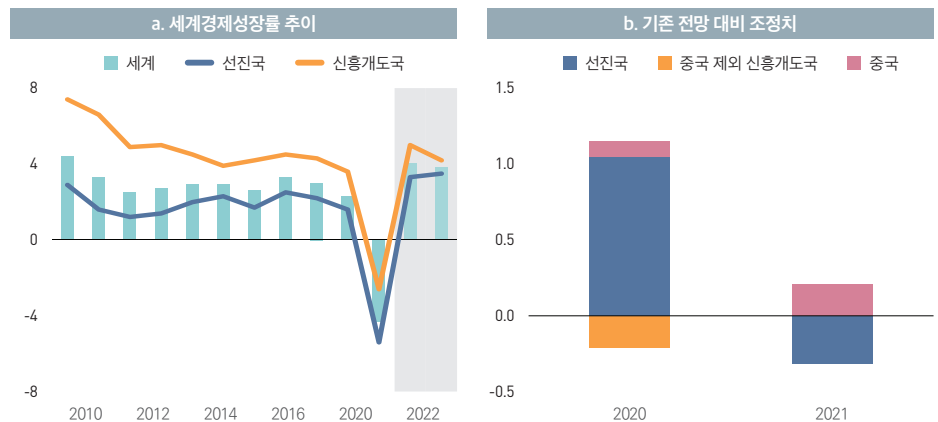


1. 세계경제전망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은 2021년 1월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4.3%, 4.0%로 전망하였다. 지난 6월 전망치(-5.2%, 4.2%)와 비교하여 2020년은 0.9%p 상향 조정, 2021년은 0.2%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그림 1. 세계경제 기준선 전망

(단위: %, %p)



자료: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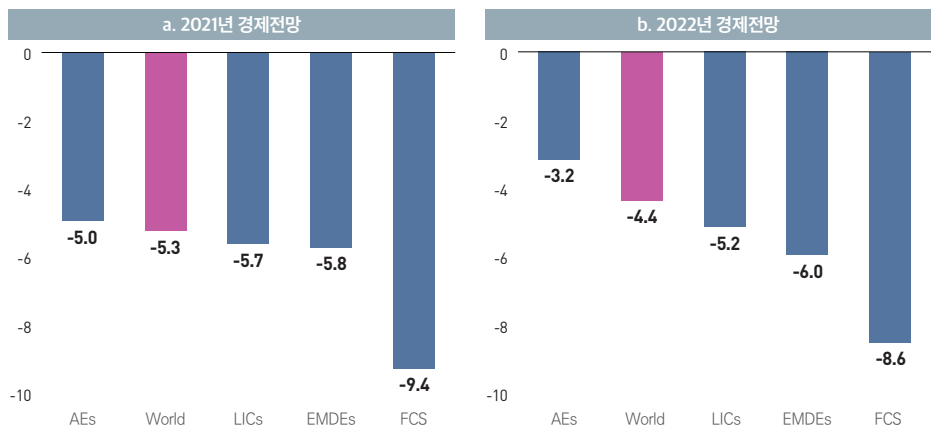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과 소비회복으로 2/4~3/4분기 실적이 개선된 상황을 반영한 수치이며, 특히 한국 포함 35개 선진국과 중국의 선전에 기인한다. 선진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5.4%로, 2020년 6월 전망치(-7.0%) 대비 1.6%p 개선되었다.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6%이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개도국에서 상황이 악화되어 2020년 6월 전망치(-2.5%) 대비 0.1%p 낮춰졌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심화된 글로벌 봉쇄의 영향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4.2%) 대비 하향 조정된 4.0%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이하 팬데믹) 대응을 전제로 한다. 만약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백신 공급을 실패하는 등 효과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 대비 2.6%p 하향 조정된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전 세계은행에서 2020년 1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2021년 세계경제전망은 5.3%p, 2022년 세계경제전망은 4.4%p 감소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를 세계 경제가 영구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림 2.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전망치 대비 조정비율

(단위: %p)



주 1) AEs(Advanced Economies)는 선진국, EMDEs(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는 신흥개도국, FCS(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는 취약·분쟁피해국, LICs(Low-Income Countries)는 저소득국가를 의미

2) 2020년 1월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2021년 1월에 발표한 수치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2. 지역별 전망

2020년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태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2020년 6월 전망보다 개선된 지역은 중국, 베트남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과 브라질 등이 포함된 중남미 지역 뿐이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0.9%(기존 전망 대비 0.4%p 개선), 2021년 7.4%(기존 전망 대비 0.8%p 개선)이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6.9%(기존 전망 대비 0.3%p 개선), 2021년 3.7%(기존 전망 대비 0.9%p 개선)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은행 지역별 경제 전망치

(단위: %)

		세계	선진국		신흥개도국					
			미국	유로존	동아태	유럽·중양아	중남미	중동·북아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2020년 6월 전망	2020년	-5.2	-6.1	-9.1	0.5	-4.7	-7.2	-4.2	-2.7	-2.8
	2021년	4.2	4.0	4.5	6.6	3.6	2.8	2.3	2.8	3.1
2021년 1월 전망	2020년	-4.3	-3.6	-7.4	0.9	-2.9	-6.9	-5.0	-6.7	-3.7
	2021년	4.0	3.5	3.6	7.4	3.3	3.7	2.1	3.3	2.7

자료: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선진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유로존, 일본 모두 2020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었지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 이상의 불황을 겪었으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 전망 보다 2.5%p 개선된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5%p 악화되어 3.5%로 전망된다.

유로지역은 서비스업 수요 감소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EU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제성장률은 -7.4%로, 기존 전망 대비 1.7%p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개선된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초기 백신 공급, 백신 외부 수요 증가로 3.6%의 경제성장률(기존 전망 0.9%p 하향 조정)이 전망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0년 성장률(0.9%)은 1967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역별 격차에 기인하며, 중국(2.0%)과 베트남(2.8%)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역성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전 중인 필리핀과 관광업 비중이 큰 피지, 태국, 팔라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2021년에는 중국 경제의 견인과 효과적인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한 경기침체가 나타나며 2020년 -2.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자본 유출과 환율 절하의 심화, 서비스업과 관광업의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효과적인 백신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로 기존 전망 대비 0.3%p 악화된 3.3%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중남미 지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보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10.0% 이하의 성장률이 나타난 국가가 전체 신흥개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 반면, 중남미 지역의 경우 세 나라 중 하나 폴로 -10.0%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남미 지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큰데 기인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는 식량불안으로 이어졌으며 수출 감소와 관광업의 불황으로 전체적으로 -6.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에는 백신 공급과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3.7%의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된다.



중동·북아프리카는 실업률의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출국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중동·북아프리카의 2021년 경제성장률(2.1%)보다 0.3%p, 원유 수입국의 경제성장률(3.2%)보다 1.3%p 낮은 수준이다.

남아시아의 경우 2020년 인도(-9.6%)의 경기침체와 대부분 국가의 빈곤, 실업의 문제로 인하여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에도 금융불안,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부재,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인하여 3.3%의 미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은 낮은 평균연령, 교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비교적 더딘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로 1인당 소득감소를 -6.1%,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은 70%(전년 대비 8%p 상승)로 나타나며 2020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수출 증가와 백신 개발, 효과적인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로 인해 2.7%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세계은행의 정책 제언

세계은행은 팬데믹 이후, 장기적 성장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대안으로는 정부 수입 증대 및 국내 자원 이동을 통한 재정 건전화,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팬데믹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효율성 증대를 꼽았다. 또한, 관광업이나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산업 다변화가 필요하며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섬나라와 같이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Climate Resilience)에 투자해야 하며, 제도상의 제약이나 재정 재원의 부족을 겪는 국가들은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표 2.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

(단위: %, %p)

	2018	2019	2020 ^a	2021 ^f	2022 ^f	2020년 6월 전망 대비 조정폭	
						2020 ^a	2021 ^f
경제성장률(시장환율 기준)							
(세계)	3.0	2.3	-4.3	4.0	3.8	0.9	-0.2
선진국	2.2	1.6	-5.4	3.3	3.5	1.6	-0.6
- 미국	3.0	2.2	-3.6	3.5	3.3	2.5	-0.5
- 유로지역	1.9	1.3	-7.4	3.6	4.0	1.7	-0.9
- 일본	0.6	0.3	-5.3	2.5	2.3	0.8	0.0
신흥시장·개도국	4.3	3.6	-2.6	5.0	4.2	-0.1	0.4
원자재 수출국	2.0	1.6	-4.8	3.0	3.2	0.1	0.0
원자재 수입국	5.7	4.8	-1.3	6.1	4.8	-0.2	0.6
(동아시아·태평양)	6.3	5.8	0.9	7.4	5.2	0.4	0.8
- 중국	6.6	6.1	2.0	7.9	5.2	1.0	1.0
(유럽·중앙아시아)	3.4	2.3	-2.9	3.3	3.9	1.8	-0.3
- 러시아	2.5	1.3	-4.0	2.6	3.0	2.0	-0.1
(중남미)	1.9	1.0	-6.9	3.7	2.8	0.3	0.9
- 브라질	1.8	1.4	-4.5	3.0	2.5	3.5	0.8
(중동·북아프리카)	0.5	0.1	-5.0	2.1	3.1	-0.8	-0.2
- 사우디	2.4	0.3	-5.4	2.0	2.2	-1.6	-0.5
(남아시아)	6.5	4.4	-6.7	3.3	3.8	-4.0	0.5
- 인도	6.1	4.2	-9.6	5.4	5.2	-6.4	2.3
(사하라이남)	2.6	2.4	-3.7	2.7	3.3	-0.9	-0.4
- 남아공	0.8	0.2	-7.8	3.3	1.7	-0.7	0.4
■ 국제무역량 (전년 대비)	4.3	1.1	-9.5	4.9	5.1	3.9	-0.4
■ 국제유가 (전년 대비)	29.4	-10.2	-33.7	8.1	13.6	14.2	-10.7

주: 세계은행은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 기준, IMF와 OECD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 기준 사용, 세계은행 전망을 PPP 기준으로 환산 시 2020년 -3.7%, 2021년 4.3%

자료: World Bank(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1」



가트너가 예측한 ‘행동인터넷’은 재정정보원에서 작동 중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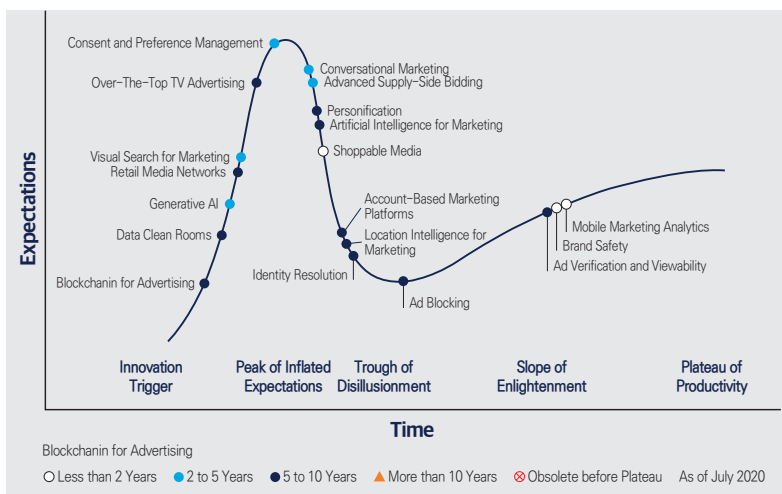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 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 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 주제는 행동인터넷(IoB)이다.

미래는 과거보다 비싸다. 이미 경험한 과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시간여행이 실현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미래는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의 영역일 것이다. 그렇다고 미래 예측이 점쟁이의 독점사업은 아니다. 기술 트렌드를 보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기술이 지금 속도로 발전할 경우 20년 뒤에 개인, 가정, 학교, 병원, 공장을 어떻게 바꿀지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다. 기술예측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보고서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들이 사본다는 가트너 보고서다. 가트너는 IT기술 컨설팅 그룹인데, 기술예측보고서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Gartner Hype Cycle)이라는 그래프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표시했다. 새로운 기술은 ① 혁신적인 기술로 조명받는 시기(Innovation Trigger) → ② 거품기대치의 정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 → ③ 거품붕괴(Trough of Disillusionment) → ④ 합리적 재조명(Slope of Enlightenment) → ⑤ 성숙기(Plateau of Productivity) 등의 생애주기를 거친다는 것이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기술이 현재 이 그래프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그래프상의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컴퓨터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보철 기술의 위치는?

딥러닝은? 안면인식기술은? 사서 보지 않아도 가트너 사이트에서 맛보기 샘플을 볼 수 있다. 옆의 그림은 디지털 광고 분야의 여러 기법들이 각각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가트너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예측에서 권위를 가진 가트너가 지난해 말 ‘2021년 IT기술 트렌드(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를 발표했다. 가트너는 이 보고서에서 △행동인터넷 △분산형 클라

그림 1. Digital Advertising 기술들의 하이프 사이클



우드 △AI 엔지니어링 △초자동화 △프라이버시 컴퓨팅 등 9개 기술을 2021년 유망 기술로 꼽았고,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다. 이 중에서 이 지면과 가장 관계가 깊은, 즉 데이터 분야 기술은 단연 행동인터넷(IoB: Internet of Behavior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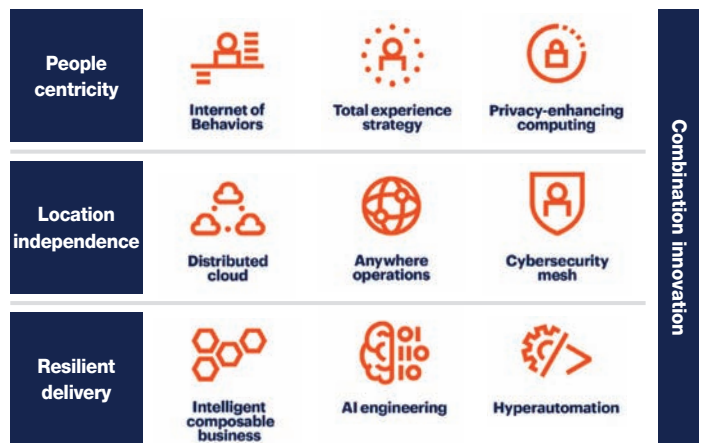
IoB? 많이 본 조어라고? 맞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확장버전이다. 잘 아는 대로 사물인터넷은 사물 안에 센서와 인터넷프로토콜(IP)이 내장돼 있어, 사물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면 차에서 집 에어컨으로 데이터가 전송돼 에어컨이 작동하고, 전기밥솥으로 데이터가 전송돼 밥솥이 취사모드가 된다. 승용차, 육조, 전기밥솥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집에 적용하면 스마트홈이고, 농장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스마트팜이고, 공장에 적용하면 스마트팩토리다. 물론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어 음성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개입시켜도 된다.

행동인터넷은 사물인터넷에 설치된 센서가 사람의 행동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분석·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가트너 자료를 토대로 언론들이 예로 든 것이 코로나19 온도 측정인데, 재정정보원에도 설치돼 있다. 1층 입구의 '얼굴인식 열 감지기'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과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한 뒤 이를 회사 ERP에 전송한다. ERP는 미측정 직원 또는 고열 환자를 걸러내 직원에게 문자를 전송한다. 자동 데이터 수집 및 행동 교정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터넷이다. 온도 측정·전송에 그치지 않고, 얼굴 인식과 동시에 책상 위 PC의 부팅이 시작되는게 개인적 희망이다.

행동인터넷은 특정 행동을 장려·억제하거나, 고객별 개인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고객 특성을 파악해 평가하는 등 무궁무진한 용도를 갖고 있다. 운전자별로 차

그림 2. 2021년 9개 유망기술



량속도, 운전거리, 운전시간, 신호준수 여부 등을 측정·분석해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UBI: Usage-Based Insurance)도 행동인터넷에 기반한 금융상품이다. 안면인식·표정감지·음성분석 기술을 통해 면접대상자의 감정적 동요, 불안, 거짓말을 걸러내는 인공지능 면접도 행동인터넷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 데이터는 클릭 또는 터치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활용됐다. 자전거 웹툰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자전거용 신발을 구입한 사람의 스마트폰엔 유독 자전거 광고가 많이 보이는 이유이다. 이전 이렇게 클릭·터치를 하지 않아도 모든 개인 행동이 행동인터넷에 의해 디지털로 포착되고 데이터로 변환·축적된다. 필자가 추정컨대, 자전거 동호회원이나 자전거 출퇴근자의 얼굴, 자전거 모델, 자전거 연식 등이 길거리 센서에 인식되면, 그 사람 스마트폰에 조금 더 비싼 모델의 자전거 광고가 날라오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물론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트너는 2023년께면 세계인구의 40%, 즉 30억 명의 개별행동이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추적되고 데이터로 측정·분석·활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데이터경제는 자발적인 클릭과 터치 이외에, 행동인터넷이라는 무궁무진한 '데이터 광맥'을 또 하나 발견한 셈이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이끌어갈 「데이터기반행정법」 문답풀이



Interview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이 상 수

데이터를 활용해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체계'가 구축됐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큰 변곡점이 될 「데이터기반행정법」의 본격 시행을 맞아 법제처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을 만나 법령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Q 공공데이터 활용이라면 기존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나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여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공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등록, 공개 등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행동)을 하라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공동활용하고 서로 주고받을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적용받는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학교와 특수법인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다른 기

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보유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분야별 활성화 대책,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고, 시행계획에는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제6조 및 제7조, 영 제8조).

Q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의 총괄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Q 각 기관들은 자체 보유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는데,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무엇이고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이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행

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해야 하는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시로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8조, 영 제9조).

Q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장이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영 제11조).

Q 요청한 데이터는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민감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Q 기관들은 데이터를 더 받고 덜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비밀 등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공 제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공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데이터활성화위원회에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및 제13조, 영 제14조).

Q 제공받은 데이터를 타기관이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5조).

Q 관련 기관들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영 제16조).

Q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공데이터 평가와 별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영 제21조).

한편,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가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는 자체평가가 주라면 공공데이터평가는 행정안전부의 평가가 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Q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보니 각 기관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교육이나 설명회 계획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이행 필요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법령 주요내용과 운영가이드 교육 및 설명회를 2021년 1월에 실시했습니다, 2월 중으로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을 확정·배포하고,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실태 점검을 위한 지표의 설명회를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자의 데이터 역량강화 제고를 위해 모든 기관이 수강 가능한 교육을 수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Q 데이터가 자본·노동을 능가하는 경제요소로 취급받는 '데이터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데이터3법 개정, 데이터기반행정법 제

정, 한국판 뉴딜 등 발걸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데이터관리 역량이 몹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 전략 등 추진기반 미흡으로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데이터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국가자산임을 인식하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IoT)을 활용하여 데이터 연계 및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으로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데이터 전공자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얼마 전, 공무원 종류(직류)에 데이터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데이터직류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행정기관에도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정통계의 발전, 미래를 여는 길이다

육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운용 역량은 여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다양한 재정지표들의 현 수준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태적(Static) 분석은 재정지표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 예컨대, 정부부채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재정운용 역량이 더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부채가 높다고 하더라도 GDP 규모, 기축통화 여부, 가계부채, 기업경쟁력, 복지수준, 고령화 수준 등에 따라 재정역량은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태적(Dynamic) 분석이 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재정지표의 기준선(Baseline)을 장기전망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기준선 전망은 재정운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의 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별비교가 아직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신 또 다른 동태적 분석으로서 국가별 재정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관련 재정지표들과 함께 조명하면서 그 변천의 함의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재정운용 변천에 대한 정치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재정역량을 진단할 수 있고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험으로부터 통찰을

재정운용의 변천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서구의 재정변천사라는 역사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근대국가를 완성했으며, 또 국민들의 의지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근대적 재정운용의 탄생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수백 년에 걸친 서구의 재정운용 변천과정을 준거(準據)로 하여 우리의 재정역량과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역사를 조명해보면 근대적인 재정제도는 조세를 의회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로부터 출발한다. 1217년의 영국 대헌장(Magna Charta)은 국왕의 세금 전횡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세로 조성된 자금의 지출목적과 방법을 국왕에 전부 위임하고 있었다. 1688년의 명예혁명에 의해 비로소 의회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지출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의회의 지출통제가 이루어지면서 1760년에는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분리되었고, 또 1787년에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로 통합되는 통합예산제도가 등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회계감사원이 1866년에 설치되며 예산편성-승인-집행-감사의 예산주기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근대적 재정제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이 19세기에는 유럽대륙에, 20세기에는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에서 명문화된 근대적 예산원칙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은 ‘예산총계주의’, ‘단년도 예산주의’, ‘회계연도 독립’, ‘수지균형’, ‘국고통일’,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원칙들은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부정부패, 오류를 방지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원칙에서 결과중심 재정으로

절차중심의 이러한 재정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도전을 받으며 경제적인 효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36년 케인스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에 의하면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이라는 결과를 위하여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경기불황에서는 재정적자를 경기호황에서는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임무이기에 수지균형에 집착하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인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소득보전 및 재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라는 결과를 증시하는 확장적 재정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1970년대까지는 큰 저항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가처분소득과 이윤은 증가하고 경기침체는 짧고 가볍게 지나갔으며 생산성 증가는 높았고 실업률은 낮았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강력한 정당이 존재하였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높아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사회적 보호를 원했고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재정낭용을 견제하는 균형예산 준칙이라는 고삐가 풀려버림으로써 재정규모와 재정적자 그리고 국가채무는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에 따른 불황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의 역량은 점차 취약해졌다. 많은 국민들이 재정-정치(Fiscal-Politics)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재정포퓰리즘을 극복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며 공공부문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이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의 재정이론은 재정총량에 대한 준칙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미시재정에서도 결과중심의 시각을 강조하였다. 개별 예산항목은 신탁자인 국민과 그 수탁자인 정부 사이에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사업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재정통계와 정부회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개별 예산사업의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정된 원가범위 내에서 개별 예산사업의 사전 명시된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원가와 성과정보를 기초로 민관(民官) 경쟁입찰을 장려할 때 개별 사업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전개

서구 선진국의 이러한 재정운용 변천사는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변천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재정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에서 시작하는데, 이 때 조세금납제, 조세법률주의,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 통합예산제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우리는 굴욕적인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근대적 재정제도의 일부를 타율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식민지 신민(臣民)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으며 국민들의 의지는 철저히 무시된 채 당시 전 세계 그 어느 식민지들보

다 더 가혹한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근대적인 재정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하였다. 1948년의 정부수립, 1950년의 한국전쟁, 1950년대의 원조경제,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 1980년대의 경제 및 재정안정화, 1987년의 민주화, 1997년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재정제도와 재정운용 경험을 착실히 쌓아나갔다. 이제 우리는 재정운용의 지난 변천사를 선진국들의 경험에 대비해보면서 향후 재정역량의 제고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통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출범한 이후 50여 년만인 2000년대에 이르러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정치·경제권력이 집중된 개발국가에서 건실한 민주국가로, 보통 수준의 복지국가에서 상당 규모의 사회적 보호망을 갖춘 국가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세금에 대한 저항은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지출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주류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긴요해졌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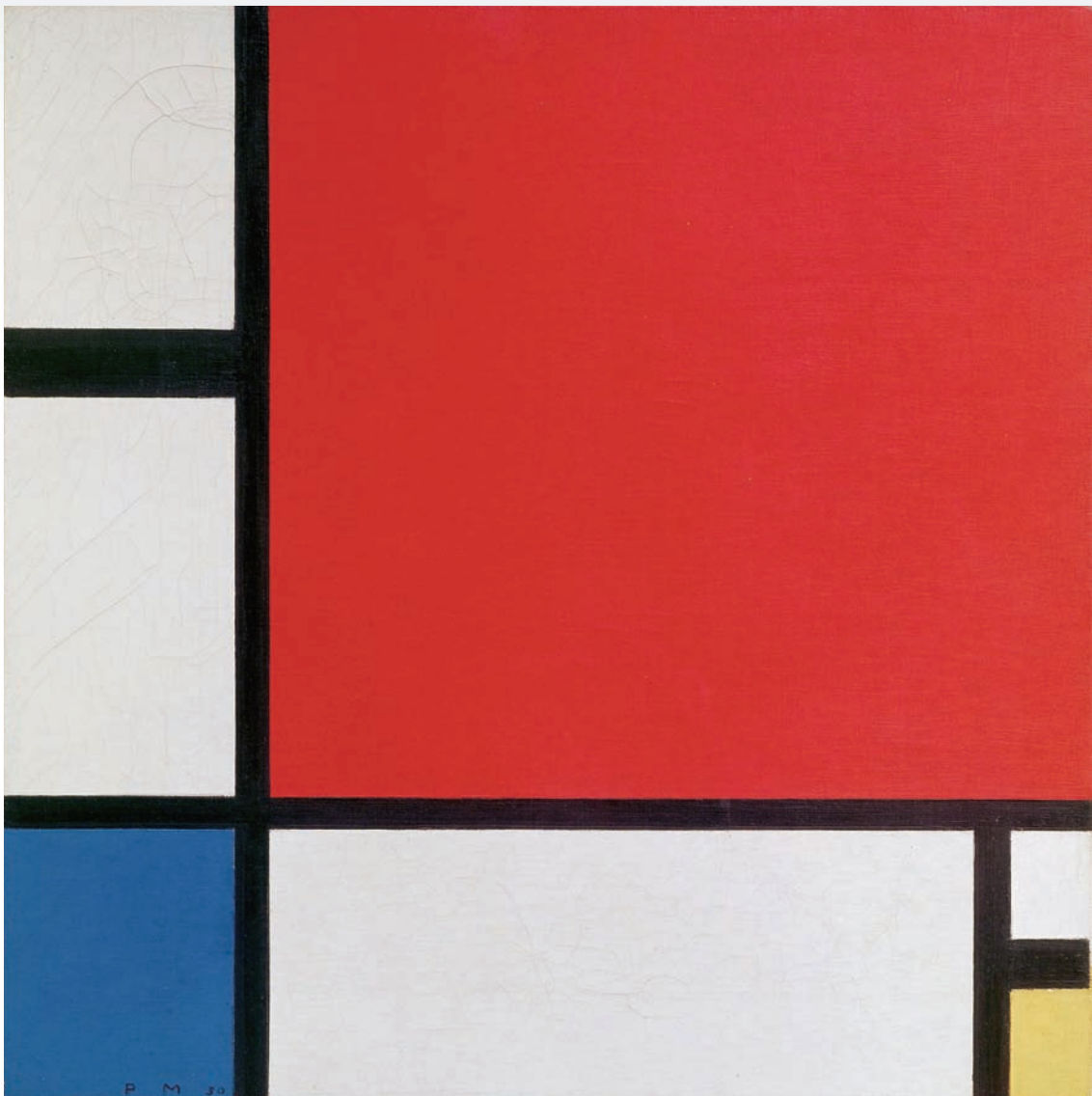
재정민주주의는 재정통계의 발전으로부터

2020년대 현재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재정문제들은 1980년대 선진국들이 겪었던 재정적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득보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재정역량 사이의 불일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점차 많은 재정이슈들이 정치쟁점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다양한 재정개혁들이 시도되었지만 개혁의 성과는 극히 미미하여 재정운용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정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이 불가피하다.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급격한 고령화를 앞둔 우리 시대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이다. 재정개혁은 재정의 수혜자와 피해자의 분포, 그리고 혜택과 피해의 규모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운용과 재정통계의 변천에서 얻은 통찰을 기초로 재정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다.

화가의 눈과 경제학자의 모형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Piet Mondrian, <Composition with Red, Yellow and Blue>, 1930, Oil on Canvas, 46 x 46cm, Kunsthaus Zürich, The Zurich

불의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타계한 소설가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 Exupery)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오아시스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눈을 생텍쥐페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과학자들의 중요한 임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불변의 법칙을 밝혀 내는 일이다. 경제학자 역시 경제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일관된 법칙이나 논리체계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론은 영어로 'Theory'이다.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Theoria'에서 유래한 것인데, 'Theo'라는 의미는 '본다'는 뜻이다. 이 때 본다는 뜻은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의 본질적 구조를 알아본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 자동차의 겉모습만을 보아서는 자동차의 본질 즉,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동차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자동차를 이해하는 데 보이는 사실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거한 뒤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의 기본적 구조인 모형(模型)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모형이란 이론화 작업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이런 모형은 의사들이 환자의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해보는 X-ray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법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제모형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복잡한 경제현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거(消去)해서 단순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필수 불가결하게 남겨진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추상화(抽象化)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추상화된 모형의 세계는 결코 현실의 세계는 아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추상적 모형에 기초한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자는 현실의 세계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 가령,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시장 형태지만, 완전경쟁모형을 통해서 경제학자는 현실 시장을 더 잘 분석해 내는 것이다.



Piet Mondrian, <Gray Tree>, 1911, Oil on Canvas, 79.5 x 109.1cm, Gemeentemuseum Den Haag, The Hague

애거서 크리스티가 창조해낸 명탐정 에르퀼 푸아로(Hercule Poirot)의 특징은 범행 현장에서 좌충우돌식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범행의 추상화된 모형(일종의 가상적 시나리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푸아로는 그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안락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편이 문제 해결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네. 그 때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게 되기 때문이지” 푸아로의 이 대사는 현실에 대한 모형화(Modelling) 작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과학자와는 달리 예술가는 이러한 모형화 작업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폴 세잔(Paul Sezanne, 1830~1906)은 인상파와 입체파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화가다. 그의 화법은 이론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모형의 구성과 대단히 흡사하다. 세잔이 추구한 것은 자연과 사물의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형(原形)의 형태에 대한 탐구였다. 이는 과학자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모형화 작업과 비슷하다. 그는 자연 속의 모든 모양은 삼각형과 사각형, 혹은 원으로 이루어졌고, 사물의 형태는 구와 원통, 원뿔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사과를 원이고 산은 원통형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그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구조와 형태에 집착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잔의 생각은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입체파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후에 칸딘스키나 몬드리안 등은 사물의 구성을 점, 선, 면이라는

조형원리로 단순화하여 추상미술의 효시가 되었다.

특히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보다는 대상의 기본적 구조와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그림에서 자연의 모든 물상(物象)은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단순화된다. 가령, 나무를 입체로, 입체를 면으로, 면을 선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추상미술을 개척하였다. 몬드리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이는 세상을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복잡하고 달라보여도 모든 사물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고 그것이 통일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의 작품 ‘컴포지션(Composition)’ 시리즈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나 건물도 궁극적으로는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면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수평선은 보통 땅과 바다를 상징한다. 수직선은 그 바탕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수직선과 수평선들이 합쳐지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그림 속에는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는 4각형의 면에 원색의 색채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각 개체의 개별적인 모습과 삶의 원형이 담겼다. 그는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4각형의 원색만으로 자연과 세상, 그리고 인간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몬드리안의 〈회색나무(Gray Tree)〉같은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단순화, 추상화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쉽고 단순한 표현방식을 빌어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를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예술가적 심미안적 사고(思考)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내면의 페르소나(Persona)는 결코 겉모습으로부터는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과학자의 엄정한 눈은 사람의 진정한 페르소나를 볼 수 있는 혜안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또한 화가의 심미안과 같은 것이다.

몬드리안의
〈회색나무(Gray Tree)〉같은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단순화, 추상화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쉽고 단순한
표현방식을 빌어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를 그려낸
것이다.

간섭주의 경제학의

개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우리는 모두 장기적으로 죽는다”

“왜 당신은 생각이 단기적이냐”라고 어느 한 사람이 편지 섞인 말로 물었다.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말로 응수한 한 사람이 영국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다. 원래 도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먼 장래를 다룬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비웃음은 순간적 쾌락의 중시와 미래의 경시를 의미한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의사결정을 중시하라는 뜻은 시장경제 원칙을 버려도 좋다는 의미다. 그 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말은 변영의 원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간섭주의 믿음을 상징한다.





흥미로운 건 그런 말이 나온 배경이다. 러시아 출신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했고 동성애도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케인스는 블룸스베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핵심 멤버였다. 블룸스베리 그룹은 독립심, 절약정신 등 도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에 현재를 중시하는 쾌락적인 집단이었다. 케인스가 성장하던 시기는 청교도적 도덕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였는데 게다가 청교도 가정 출신이었던 그가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적 도덕을 부정했던 것이다.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케인스의 경제관을 또렷하게 말해주는 것은 소비가 선(善)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저축한들 소용이 없고 소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를 이해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결국 저축은 악(惡)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국민 전체의 소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리지 않을 테고 기업은 감원하여 실업도 늘고 국민소득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케인스는 번영의 원천이 자유시장이지
아니라 정부라고 확신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정부관(政府觀)이다.
그는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사람을 공공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엘리트라고 믿었다.
정부는 판단이 뛰어나고 오류도
범할 수 없다고 했다.

‘절약의 모순’라는 멋진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족족 쓰는 것이 고용을 늘리는 일이고 애국하는 길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돈을 멋대로 쓰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카드회사의 영수증 뿐이다. 케인스는 절약의 모순을 너무 쉽게 인정한 나머지, 저축이 늘어 소비수요가 줄어들면 자본재 생산, 즉 투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무시했다. 직시해야 할 점은 현대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산업 분야는 부품, 설비, 소재산업 등, 소비재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단계의 자본재 시장이라는 점이다. 저축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게 자본재 시장이다. 저축의 모순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소비재 생산에서부터 자본재 생산 단계, 원료 채취 단계 등 일련의 길고 복잡한 자본주적 생산 단계를 설명하는 자본이론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케인스에게는 그런 이론이 전혀 없다.

케인스의 넥타이를 맨 사람들

변영을 이끄는 게 정부다?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전체노동을 흡수할 만큼의 유효수요가 부족하기에 실업과 불황이 필연이라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총수요(소비와 투자)를 관리할 정부의 강력한 힘이라고 역설했다. 민간투자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자율을 내리고,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을 증대하기 위해 양육수당, 풍부한 복지급여 등, 복지와 분배의 평등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균형예산을 지키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케인스는 변영의 원천이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고 확신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정부관(政府觀)이다. 그는 예산을 짜고 나라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사람을 공공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엘리트라고 믿었다. 정부는 판단이 뛰어나고 오류도 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를 그렇게 믿고 재량적인 권력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비대화로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경제침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간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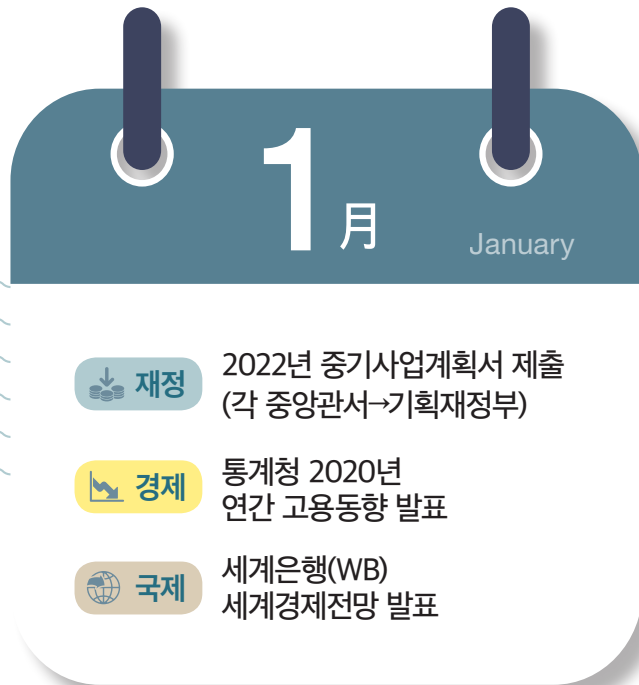
대공황으로 미국은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그런 위기는 독일 등 유럽에도 파급되었다. 이런 참혹한 경험을 한 인류는 구세주로 케인스를 소환했다.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완전고용법 또는 경제안정법을 제정했다. 성장과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도 케인스의 영향이다. 루스벨트에서 닉슨에 이르기까지 모두 케인스의 넥타이를 맨 정치가들이었다. 한때 학계의 대부분은 케인스 추종자들이었다.

케인스의 처방이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방만한 통화팽창의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 그리고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황을 대공황으로 악화시켰다는 것이 신(新)경제사학의 확고한 인식도 있다.

세계 대공황 이후 세계의 이목(耳目)은 케인스에게 집중했지만, 그의 사상은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 정부지출만을 증대하면 실업과 불황에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장담하던 그의 사상 때문에 1950년대 이후 유례없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실업, 경제침체를 겪어야 했다.

결국 케인스의 사상이 남겨놓은 것은 나라의 빚더미뿐이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을 국제금융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결국 케인스를 대체할 새로운 구원투수가 필요했다. 그가 바로 하이에크가 아니었던가!(월간 나라재정 2020년 12월호 참조). 1980년대 이후 그런 침체에 빠졌던 영·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구출한 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었다는 걸 우리는 주지해야 한다.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 재정**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재정**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경제**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August

08

- 재정**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통계청, 1.13.)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5.9%로 전년 대비 0.9%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는 110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5천 명(4.2%)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690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8천 명(-0.8%) 감소함.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기획재정부, 1.19.)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지원,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한국판 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 발표(WB, 1.6.)

- 세계은행(WB)은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3%,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0%로 전망. 각 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 2020년은 기존 전망(5.2%) 대비 0.9%p 상승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4.2%) 대비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

April

04

- 재정** 2020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경제**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2022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12월 28일(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실사구시를 지향하여 대학 최초로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해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교육'의 특성화된 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평생직업능력 개발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한국기술대학교 실습생에게 최신 기술의 IT 업무 체험과 성공 취업 컨설팅 제공 등의 맞춤형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형 인재 육성이란 공통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금 전달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12월 23일 남산원 및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금과 헌혈증(110장)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임원의 자발적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과 임직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 중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100점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12월 31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해 2019년도 97점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양호)을 달성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전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3개 분야 13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중앙부처·지자체·지방공기업 등 780여 개 기관 중 1위에 올랐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연기금투자물

☆ 상품 당첨자

pic*****@nate.com
mym*****@naver.com
bbo*****@naver.com
lee*****@daum.net
kyh*****@naver.com
cho*****@metro.seoul.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월간 나라재정>의 모든 기사가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보니,
다음 해 예산편성에 특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청소년 관련 정책 이야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pic*****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